

전기차와 함께 ON
수많은 혜택 공개



전기차는 환경만 생각한다?
전기차는 주머니도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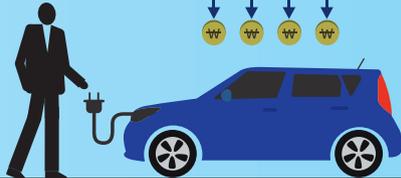


전기차 비싸지 않아?

“전기자동차 한 대 사면
혜택만 차 한 대 가격!”
-24,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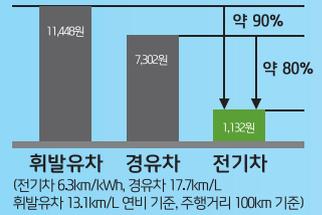


정부보조금 1,400만원
지자체보조금(서울시 기준) 550만원
개발서비스 최대 200만원
교육 및 취득세 최대 260만원



연료비도 엄청 싸네?

“한 달 휘발유 값이면 열 달을 달린다고” 연료비 $\frac{1}{10}$
(유류비는 '17.1.6 전국 평균가격 기준)



“연간 96만원
혼잡 통행료 면제에!”

하루 2회
월 20일 출근 X 1년
(서울시 등록 차량 중
전자태그 발급 차량 기준)

통행료에 주차비까지?



“연간 219만원
주차비 할인까지!”

공영주차장 50% 요금
하루 4시간 X 1년
(5분 250원 이용료 기준,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및
차량등록증 지참 필수)

환경도 생각하고
혜택도 많은 전기차
탈수록 매력적이네!

다가은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대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시대! 환경도 생각하고, 주머니도 지키세요

따뜻할 溫, 연결할 ON, 다가은 온

미래로부터 ON

미래로부터 ON

미래 기술의 중심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인간적이며 모든 것이 연결된 미래
현대자동차그룹은 당신과 함께 따뜻한 미래를 향하겠습니다

HYUNDAI
MOTOR GROUP



▶ 한국수출입은행이 19일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 6억31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종구 수은 행장, 박찬봉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 홍영표 수출입은행 전무이사(사진 앞줄 오른쪽)가 22일 상암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FC서울 한병석 상무보(사진 앞줄 왼쪽)에 후원금을 전달한 후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날 수출입은행이 전달한 후원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다문화가정·탈북민 자립 등 수은이 중점 후원하는 분야를 포함해 장애인 자활, 지역아동센터 지원·설립 등 총 24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3년간 사랑의열매에 총 20억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이덕훈 은행장은 후원금을 전달한 뒤 “수은의 자체 사회공헌프로그램인 ‘희망씨앗’이 마련한 소중한 후원금이 우리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랑의열매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다 의미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ANU LATTE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커피



“
베나치오 효과를
보신 분들은
베나치오만 찾습니다
”

소화 안될땐
빠르고 시원하게
베나치오



위운동으로
빠른 소화효과!

위운동을 촉진시키는 베나치오의 생약성분
위운동이 잘 돼야 소화가 잘 됩니다

인터넷에서 **베나치오** 를 검색하세요

빠르고 시원하게
베나치오



노후 불량 건축물 도시환경 정비 천호1구역



저이용 공공시설, 토지 활용사업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플랫폼 창동어



10분 동네 기반의 개방형 저층 주거단지 조성



재난위험, 열악지역 정비 정릉스카이, 강남아파트



역사문화보존 및 진흥 돈의문박물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갑니다

도시재생 리츠에서 마을자산을 활용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까지
삶의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Seoul Happiness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2016.9.1부터 법인명이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커버스토리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의 출현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이 평화적 시위를 통하여 무능하고 부패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 당하게 하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하게 한 사건은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현대사의 일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광화문을 밝히던 촛불민심은 무엇을 원했는가? 기본적으로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대통령,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면서 국가의 품격을 유지하는 대통령을 바란다.

새 정부에 바란다



경실련 | 공동대표 박상기 선월몽산 김원배 김대래 중앙위원회의장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 양혁승 정책위원장 소순창 사무총장 윤순철
월간경실련 | 발행인 윤순철 편집인 채준하 편집기자 윤은주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고번호 종로마 00088 정보간행물 전화 02)766-5627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7년 5월 19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6-5627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CONTENTS

차기정부 특집

- 10 ① 정책선거를 하려면 / 윤순철
- 13 ② 새 정부에 바란다 / 박상기
- 16 ③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 / 권오인
- 19 ④ 문재인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 / 김삼수
- 23 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과제 / 남은경
- 27 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제 / 김성달

전문가 칼럼

- 31 ① 차기정부에 바란다 I. 경제분야 / 박상인
- 34 ② 차기정부에 바란다 II. 복지분야 / 정창률
- 36 ③ 차기정부에 바란다 III. 정치분야 / 조진만
- 38 ④ 차기정부에 바란다 IV. 부동산분야 / 서순탁
- 40 ⑤ 차기정부에 바란다 V. 통일분야 / 양무진

대선 활동

- 42 ① 19대 대선 평가 및 차기정부 향후 과제 / 정치사법팀
- 48 ② 새 정부가 반영해야 할 경실련 19대 대선 정책과제 / 김삼수
- 54 ③ 187개 정책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답변 / 유재하
- 62 ④ 경실련과 청년들, 우리 사회 개혁과제를 그리다 / 허재필
- 65 ⑤ 시민과 함께 한 오프라인캠페인 현장보기 / 최승섭



80 '정이가 시작되는 5월' -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및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80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과제' - 19대 대선 평가 토론회

인터뷰

67 대선TF 활동가 3인 인터뷰 / 회원홍보팀

지역이야기

72 지역유권자운동본부 활동소식 / 김송원

카드로 보는 이슈

- 74 ① 최저임금 제도개선 / 19대 대선 SNS홍보팀
- 75 ② 건강보험 부과체계 / 19대 대선 SNS홍보팀
- 76 ③ 후방양제 도입 / 19대 대선 SNS홍보팀
- 77 ④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19대 대선 SNS홍보팀
- 78 ⑤ 법인세 정상화 / 19대 대선 SNS홍보팀

회원게시판

79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80 경실련 일일보고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82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67 19대 대선TF 활동가 3인 인터뷰



80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교육 분야

정책선거를 하려면

윤순철 사무총장
yunsco@ccej.or.kr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공격 발언 등 어느 때보다 혼란스런 상황에서 치러졌다.



시민들은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외형적 경제성장을 넘어 경제적 부정의와 불평등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있었다. 이 시대정신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공개된다. 정당은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이고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자의 철학과 공약을 보고 지도자를 선택한다. 그래서 공약은 정치집단이 자신들의 지향하는 가치와 사회변화의 방향을 알리는 것이고 다른 집단의 공약과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약속이다. 만약에 공약이 사회전체를 포괄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담고 있거나, 제시된 정책들이 상호 유기적 연계 없이 파편화되어 있거나, 정책 수행에 따른 치밀한 예산계획이 없다면 그 정치집단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경실련이 이번 선거에서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평가하면

첫째,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이 아닌 엉터리 공약으로 치러진 선거였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들은 공약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매우

부실한 것들이었다. 공약이 최소한 후보자 등록 때에는 제시되어야 하지만 투표일 10여일 전에야 공개되고, 공개된 공약이 논란이 일자 감추거나 숨기고, 내용은 없고 제목만 나열하거나, 공약을 실행할 예산이 없거나 제시된 예산도 엉터리였으며,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비용의 30% 이상은 반드시 정책 개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정당들이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선 공약집을 제 때에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19대 대통령선거가 대통령의 탄핵이란 특수한 조건에서 조기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당들의 대선공약집을 늦게 발표한 결과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에서 좋은 공약 경쟁을 통해 사회변화의 정책적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네거티브 공방이나 가짜 뉴스가 선거의 흐름을 장악하였다. 향후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 개발비를 보조받는 정당은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공약집을 함께 제출하도록 강제하거나 공약집을 제출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약하여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후보자들 공약의 우열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막은 선거였다. 선거는 좋은 공약을 경쟁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 108조 3은 언론기관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해 비교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후보자 등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점수로 서열(우열)화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순된 법이 정책 대결을 막고 있다. 어떤 것을 평가하던지 완전한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렵고 주관적 요소가 작용한다. 그 주관적 요소란 평가자 집단이 추구하는 자신들의 가치에 기반을 두어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검증하기 때문이다. 사회 변화를 바라는 집단이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개한 공약에 대해 자신들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좀 더 후보자들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평가에 대한 논란 속에서 정책선거가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결국 공약평가의 서열화를 금지하는 선거법의 수혜자는 정치인들이고 피해자는 시민이다. 향후 '정치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책 논쟁을 가로막는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권리이기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약하거나 정책 검증의 기회를 박탈하는 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후보자 TV토론회가 정책 경쟁의 장으로 이용되지 못했다. 미국은 비정파적 민간기구인 대통령토론회위원회(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가 토론의 방식이나 주제 등을 결정하며, 방송사별 차별화된 TV토론이 이루어진다. 한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미국의 대통령토론회위원회와 유사한 비정파적 민간기구가 방송사와 협의하여 좀 더 자유롭고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정책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후보자 정책 비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만 TV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청중들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1위와 2위 후보 간 양자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선거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금지하여 깜깜이 선거가 되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6일 전부터는 공표하지 못한다.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여론조사기관의 책임성을 모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정책 경쟁이 실종되면서 네거티브와 가짜뉴스가 넘실대는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는 오히려 왜곡된 여론과 근거 없는 비방이 은밀히 SNS 유포되는 환경을 만들었고 여론조사기관이 선거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만 제공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는 SNS 상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여론을 출렁이게 만들었음을 고려하면 과감하게 풀어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을 공개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한 소소한 규제들은 과감히 없애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여 정책 논쟁의 장을 마련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보다 의미 있는 선거 경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 금권선거, 관권선거, 조직선거의 병폐들로 인하여 공정성을 강조하는 선거법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새 정부에 바란다

박상기 공동대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arksk@yonsei.ac.kr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그 의미와 과제를 생각해 본다. 새 정부의 출현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이 평화적 시위를 통하여 무능하고 부패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 당하게 하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하게 한 사건은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현대사의 일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광화문을 밝히던 촛불민심은 무엇을 원했던가? 기본적으로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대통령,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면서 국가의 품격을 유지하는 대통령을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적 이념에 투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 상황으로 인하여 정책적 연합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당이나 정의당, 필요에 따라서는 바른정당과도 수시로 정책협의를 통하여 법안의 국회통과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정책연합은 독일 등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정권출범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기도 한다.

반면에서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남북문제를 포함한 외교적 현안, 경제회복, 실업문제,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인구정책, 그리고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포함한 적폐청산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개혁과 통합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정치적 성격을 나타내는 키워드라고 보인다. 개혁은 선거운동 기간 중 주장하였던 적폐청산을 의미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쌓인 각종 문제점을 청산하여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은 새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인 검찰 개혁과 재벌개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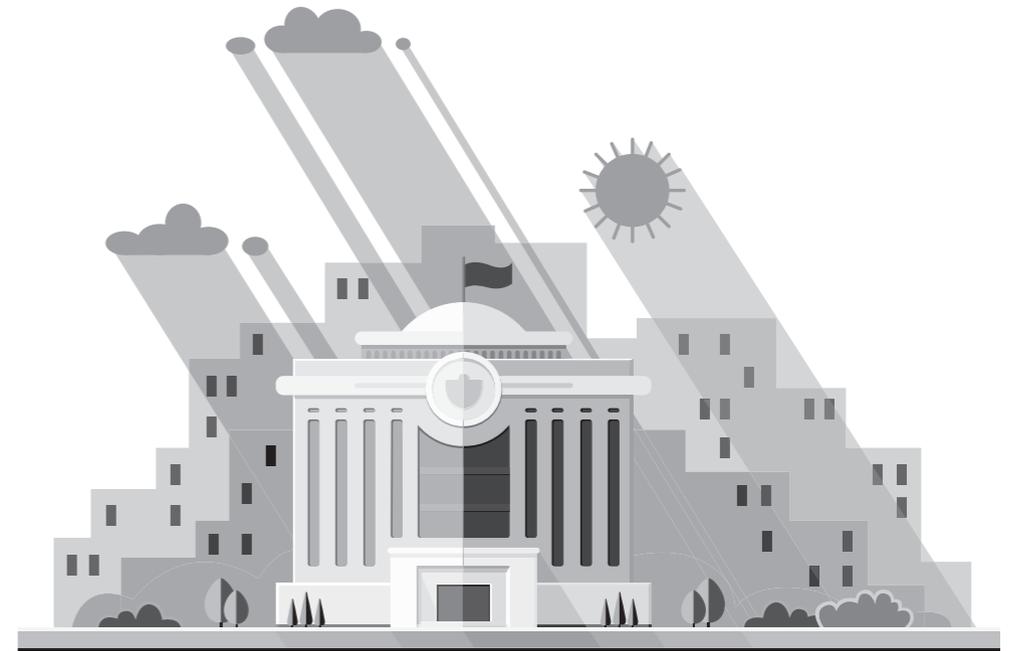
검찰개혁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평등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문민화를 통해서 법무부를 검찰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행정이 검찰행정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독일 법무부는 명칭부터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행사로 인하여 부패, 권력과의 유착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한마디로 검찰이 한국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가 되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본래의 자리를 찾게 함으로써 검찰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다음의 개혁대상은 재벌이다. 재벌 중심의 발전전략이 효과를 거둔 측면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재벌공화국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게 되었다. 재벌문제 역시 검찰과 함께 한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데에 있다. 재벌은 그 존재 자체가 문제이기 보다는 재벌 총수의 문제이고 재벌가의 문제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의 문제이다. 재벌 총수의 기업승계, 문어발식 기업경영을 위한 온갖 편법과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경유착,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계, 관계 고위직들에 대한 관리가 우리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어 왔다. 새 정부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를 위해 한 발씩 한 발씩 전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문제도 시급하다. 과학교를 제외한 자사고나 외고 등은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입시제도는 단순화하여야 한다. 현행 대입제도는 너무 복잡해서 대학에 있는 나 자신도 우리 학교의 정확한 입시 제도를 알지 못한다. 제도가 복잡할수록 온갖 사교육이 횡횡한다. 사교육은 가정의 가처분소득을 끝없이 잠식하여 소득이 높아져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증가한 소득은 사교육 시장으로 물 새듯이 흘러가 버린다. 또한 비싼 사교육은 교육격차를 확대시켜 사회적 계층이동을 더욱 어렵게 한다.

언론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합과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가 반드시 귀 담아 들어야 할 조언이다. 그러나 개혁, 청산과 맞지 않는 가치, 제도,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제목처럼 운명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설사 약속한 공약들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은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혼자서 모두 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촛불을 들었던 당시처럼 국민의 끊임없는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

권오인 경제정책팀 국장
ok@ccej.or.kr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4대 비전 12대 약속’이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12대 약속 중 제1호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제2호 ‘공정한 대한민국’, 제3호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제4호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제5호가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순이다. 일명 ‘J노믹스’라고 불릴 경제관련 공약이 2호, 4호, 5호 등에 포진되어 있다.

청사진이 없고, 구체성이 부족한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5명의 유력후보 중 가장 늦게 대선공약집을 내놓았으며, 경제관련 세부공약 중 재벌개혁, 조세정의 등의 공약이 수차례나 바뀌는 상황도 발생했다. 공약의 목표와 계획, 수단, 재원조달 방안 등에 있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고, 단순히 나열만 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예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급기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최저임금의 경우 위원회 정상화와 함께 당장 7월까지 2018년 분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최저임금법 또한 통과가 미지수이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공약에는 최저시급 1만원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슈가 되었던 ‘4차 산업혁명’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과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가 모호하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탈피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선정

현재 우리 경제는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에 의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고, 서민경제는 붕괴된 상황이다. 중소기업상권의 경우 재벌들의 진출과 기업 환

경의 악화(임대료 등)로 인해 무너져 내렸으며, 서민들의 경우 여전히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 실질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재벌개혁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과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목표의 설정과 적합한 인사를 통해 흔들림 없는 실천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언급했듯이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를 시급하게 보완한 후 국정과제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목표, 계획을 설정한 후 이에 걸 맞는 개혁적 인사를 통해 흔들림 없는 정책의 실천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를 보면, 재벌개혁의 경우 집권 초기에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벌의 민원을 받아 규제완화로 선회했다. 그 결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경영권 세습, 황제경영, 경제양극화만 심화되었다.

정부와 국회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한 전략적 과제 실행

공약 및 추후 발표될 국정과제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 지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입법권한은 물론, 행정적 기능이 있어, 의지만 가진다면, 과제의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다. 예로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통과 없이 정부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가능하고, 일감몰아주기 근절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다. 전경련 해체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산을 위한 청문절차 진행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최저임금 인상 또한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

반대 세력 및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한 협력 유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으로, 계속되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를 통한 제도개선의 경우 야당을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가 절실

히 요구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도 병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집권 여당의 정치력에 따라서 공약과 국정과제의 이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진행된 촛불시민혁명을 등에 업고 정권을 교체해 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차례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계속되어온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에 중소기업경제는 붕괴되고,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잘 못된 경제구조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 하다. 조속히 부족했던 공약을 보완하고, 경제기반을 다질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지금이 마지막 개혁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것이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다. ☺☺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 정치개혁 적폐청산 · 분권 위한 소통과 통합의 열린 리더십 필요

김삼수 정치사법팀 국장
peace@ccej.or.kr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거침없는 소통과 탈권위주의 행보에 나서면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근원적 고리를 끊어내는 적폐청산은 물론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다.

소통과 협력,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

문 대통령은 첫 국무총리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영남 총리'를 지명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면서, 동시에 '대통합, 대탕평'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정치개혁 주요 공약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입법사안 시민의회 개최로 여론수렴기능 보완 ■ 국회의원 등 국민소환제 도입 ■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투표시간 연장 ■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국회 상임위 심사제적제도 도입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심사 강화 ■ 대통령 인사추천실명제 ■ 대통령 24시간 공개 ■ 4년 중임제 · 지방분권 개헌 ■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검찰 수사권 · 기소권 분리 ■ 검 · 경 수사권 조정 ■ '최순실 방지법' 제정 ■ 독립적 대법원장과 대법관 추천위 구성 ■ 대법관 증원 ■ 법원행정처 권한 · 기능조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 1/3 비법조인 개방 ■ 국정원 인보 · 테러 · 국제범죄 전담 ■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확대

의지를 내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측근이나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국정운영에 나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전병헌 전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 관계를 조율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어찌됐든 120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다. 청와대나 정부여당은 집권당의 위세를 통해 여소야대를 상황을 바꾸려 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의 구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국회를 갈등의 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등 촛불민심으로 발현된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한 모습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정치현실에서 국민통합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 축소와 시민의 참여확대에 대한 고민이 적극 요구된다. 우리는 독선적,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미 경험했다. 이전 정권과 같이 ‘불통’이라든가 ‘국민과 맞서는 권력’으로는 민주적인 가치는 또다시 훼손될 것이다. 당파적 국정운영을 넘어선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민주적인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각 부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장·차관 인사는 매우 중요하다. 논공행상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광범위한 인재등용으로 산적인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권력의 분산을 통해 권력 남용 방지해야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건을 관여하고 방관했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요구가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권력구조의 개방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권력분산을 통해 국정농단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당선과 동시에 보수정권 동안 검사출신들이 독점해왔던 민정수석 자리에 조국 교수를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듯 국정농단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 부패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고리

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수본이 수사가 끝나자마자 의혹에 연루된 ‘수사대상자’인 법무부 간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불법적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건으로 검찰개혁의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봉책에 그쳤던 검찰의 자체개혁안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국정원은 안보·테러·국제범죄라는 업무로 인해 그 기밀성이 중시된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보다 국내사찰, 정치개입 등 공정한 정치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인 공약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연이은 국내정치 개입으로 ‘개혁 대상’이 된 국정원을 대폭 개혁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권’이 아닌 ‘국가’를 보위하는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문 대통령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관료화 된 사법부는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 독점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법권 독점은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폐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하게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과 판사 동향을 파악해 인사자료로 활용한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법원 개혁의 중요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대법관 수 증원과 구성의 다양화를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 우위적 관점이 아닌 국민 우위적 관점에서의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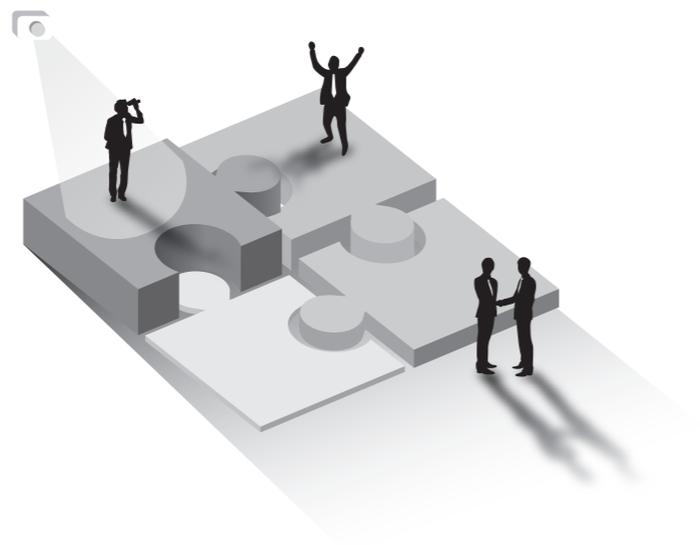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오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개혁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 △국가권력구조, △경제정의, △지방분권, △기본권, △국민참여 등의 방향에서 논의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장하는 개혁이 모색돼야 한다.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장래에 지향해야 할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경유착과 재벌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호

문 대통령 역시 4년 중임제·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여론 수렴, 국민소환권과 시민의회 등 국민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정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시민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권력구조에만 집중된 개헌은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국가 우위적인 관점이 아닌 국민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국민 우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개혁과 통합을 국정아젠다로 제시했다.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조리와 불의를 바로 세우고, 동시에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한 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과 통합을 함께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조화롭게 풀어내야 한다. 윤리성, 투명성,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임기 끝까지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공약 이행을 넘어서 복지국가를 위한 장기 비전 제시해야

남은경 도시개혁팀 국장
nari@ccej.or.kr

〈문재인대통령 복지 및 교육분야 주요 대선공약〉

구분	문재인
복지	보육 육아/ 저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도입 (0~5세 월 10만원/단계적 인상)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전체 40% 수준까지 확대 • 초등학교전학년돌봄교실확대/• 찾아가는'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내실화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국공립 수준 개선(8시간 근무제/대체교사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출산수당 지급 • 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및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
	고령화/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제공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임금 2020년까지 월40만원으로 인상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치매안심병원 설립/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 적용 •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국민연금가입 지원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퇴직연금의 수익성·안전성 강화위한 국가 역할 확대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소득분위 50%까지, 비보험 진료 급여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공공병원 의무화 및 민간 확대/근로조건과 처우개선) •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15세 이하) • 취약지 공공의료 확충/대형병원 외래진료 제한/지방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교육	대학 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 대학입시 단순화 및 수시 비중 단계적 축소
	사교육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무상교육 실시 •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국공립대학교 공동입학·공동학위제/지역 국립대 육성/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 인상 • GDP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 비중 임기내 OECD 평균수준 달성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구분		문재인
교육	교육 체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 •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중학교 일제교사를 폐지,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소요 자원 및 조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원 : 18.7조원 - 아동수당/육아휴직 확대/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40% 확충/기초연금 30만원 지급/노 인일자리 수 및 수당 2배/청년·신호부부 우선배정 등 공공임대 확대 공급/도시재생뉴딜/ 청년구직촉진수당/65세 실업급여 등 • 교육비 지원 : 5.6조원 누리과정 국고지원/고교무상교육 실현/등록금부담 경감/초등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등 • 재정개혁을 통해 자원 조달 중복성·선심성 예산 재정지출 절감, 고소득자 및 대기업 과세 정상화

※ 공약집 재정리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됐다. 지난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새로운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이제 정부는 비정상을 바로 잡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년 실업은 최대치를 기록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전 정부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미봉책에 그쳐 결국 실패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선에서 제시된 문재인대통령의 사회분야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와 개혁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출산·노후걱정 없고, 민생·복지·교육 강국 건설'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도입(만 5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 40% 확충 ▲육아휴직 급여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및 급여 인상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소득하위 70%,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폐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소득하위 50%)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일반고 단계적 전환 ▲국공립대학교 공동입학·공동학위제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는 중장기 목표설정과 추진계획 수립해야

지난 정부에서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정책은 진전이 있었지만 초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하다. 아동수당은 보육정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완 방안으로 도입이 필요하나 지급 대상을 만 5세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아동의 법적 기준은 만 18세 이하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부모나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대상을 18세로 확대해야 한다. 유사제도인 자녀장려세제도 자격조건을 18세 미만 자녀 부양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국공립시설 이용확대 뿐 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공공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현상을 개선하도록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육아휴직 확대는 실질적 급여 인상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선언적 정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노후보장제도 간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해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보완장치로 마련됐지만 최저생계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액으로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 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은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필요한 대책이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실현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단순히 국민연금 납부액을 인상해 지급액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라면 매우 단편적인 접근이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재정확보 방안으로 낮은 부과대상 소득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최저-최고연금제를 도입하여 보장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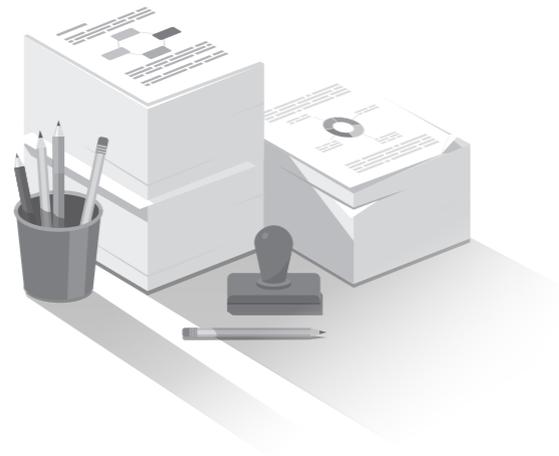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공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의무화 등이 선행되지 못하

면 실효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입의무화와 함께 수익성위주로 운영되는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단계적 실행계획 제시해야

고교 체제 단순화와 국공립대 네트워크 방안은 고교 및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높은 사교육비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등 교육문제의 원인은 결국 대학서열화에서 비롯된다.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보다는 졸업장으로 능력을 평가받고, 학교 진학을 위해 공교육은 포기하고 사교육에 매진하는 구조를 깨지 못하면 교육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약 24.3조원(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18.7조원 + 교육비 지원 5.6조원)을 복지 및 교육공약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부자 증세와 법인세 정상화 등 수입구조 개선을 통해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박근혜대통령은 재정지출 구조개선 등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초연금을 축소했고, 무상보육은 지자체에 책임을 넘겼으며, 고교무상교육은 시행조차 못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있는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과제

- 소비자 중심의 집값 안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국장
seongdal@ccej.or.kr

촛불광장에서 적폐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경실련도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단체들과 함께 높은 집값과 전월세값,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주거빈곤, 불로소득의 사유화 등에 의한 자산 양극화라는 부동산 적폐 청산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공공주택 확충은 찬성, 후분양제 도입은 반대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공주택 확충, 주거지원 확대, LTV·DTI 강화 등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점진적 도입을 밝혔다. 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 시장 개혁을 위한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또한 경실련이 질의한 집값 거품 제거의지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답변,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금의 서민주거불안의 핵심인 턱없이 높은 주거비 부담은 높은 집값과 땅값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집값을 낮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주택 확충도 헛 공약으로 그칠 수밖에 없으며, 김대중정부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정권별로 100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확충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주택 재고율이 5% 수준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공약핵심인 공공청년주택 확충과 도시재생뉴딜정책도 부작용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및 주거지원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중심이며, 이외에도 무주택세입자들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비교적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예상되어 주거불안 해소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주요 공약

구분	주요 내용
공공주택 확충 및 지원	[공공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 장기 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 확보 - 신축7만호, 기존 주택 매입 3만호, 임대 3만호 •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확보(임대료와 임대기간 제한)
주거지원 확대	• 급여대상 확대 및 지원액 단계별 현실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 집주인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유도 • 임대주택 등록시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 단계적 제도화, 지자체별 임대차분쟁조정위 내실화
도시재생 뉴딜정책	• 매년 공공재정 10조원 투입,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 •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지원 - 커뮤니티 시설(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 • 구도심,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 등을 집약적으로 정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 제고 자산으로 활용 • 노후화된 기존 주택을 정비,매입,장기 임차하여 수선한 다음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제도 도입 • 임대료 상한한도 9% → 5% 인하 / 계약갱신청구권 5년 → 10년 확대 •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확대 등
청년주거	[청년층 맞춤형 주택 30만실 공급] • 대도시 역세권내 시세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신혼부부 집문제 해결] • 신규공공임대주택 30%(연간 4만호) 신혼부부 우선 배정 •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결혼후 2년간 한시적으로 월10만원 지원)

영리추구 우선하는 민간 땅을 활용한 공공주택은 어불성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85만호의 공공주택과 청년층 맞춤형 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공공주택 중 20만호는 민간주택에 공공이 지원하고 임대료를 규제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고, 청년주택 중 20만실은 대도시 역세권내 민간택지를 지원하여 시세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모두 민간의 땅과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다.

하지만 영리추구가 우선할 수밖에 없는 민간을 공공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은 주거안정 효과보다는 민간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불로소득만 안겨주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델로 삼고 있는 서울형 2030 청년주택의 경우 이미 고가월세 논란과 과도한 민간특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서울 삼각지 청년주택의 경우 8평 기준 부담해야 할 임대료는 월 50만원으로 청년들이 지불하기에는 매우 비싸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8년 임대 후 분양전환, 용도변경, 층고완화 등의 특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강력히 비판해왔던 뉴스테이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도 공공의 땅과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유도하되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겠다고 뉴스테이를 집중 추진해왔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월세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뉴스테이 특혜를 지적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값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시세이하라 해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인 8년이 지나면 분양전환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공이 보유하고 있고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공공택지, 공기업 이전지, 국공유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민간시장의 공공주택 사업 유도는 집값이 떨어진 이후에 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연간 10조원의 토건사업으로 변질될 우려 매우 커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공약은 연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불량 노후주택 개선, 공공시설 확충, 구도심 정비 등을 통해 일자리와 도시재생을 이루겠다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유일한 개발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전면철거형 개발에서 탈피하고, 공공기관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가 주도함으로써 기존 개발사업과는 차별화하고, 임대료를 제한하는 준공공주택을 확보함으로써 개발이익도 환수하고 개발사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불량 노후주택을 개보수하고, 공공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연간 1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투입과 연간 100곳을 지정하겠다고 결정짓는 순간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물리적 토건사업의 악순환에 빠지

도시경쟁력

2017년 5. 6월호

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의 의미는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개발이익환수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공지원을 통한 준공공임대주택 확충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할 뿐 결국 민간사업자와 부동산부자들에게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확충이 아닌 유주택자의 도시환경 개선에 임기내 50조원이나 사용해야 하는지도 의문스럽다. 당장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예산도 1조원이 채 되지 않는 현실이고,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비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10조원은 MB 정부가 공급한 강남서초 공공분양주택(평당 900만원) 및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평당 500만원)을 매년 5만호~10만호(20평 기준)까지 공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정규모이다.

막대한 재정지원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미흡한 개발이익환수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공주택 사업은 민간유도보다는 공공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후퇴없이 추진해야

이외에도 무주택세입자들을 위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위해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가세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료를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확대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의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시절 더불어 민주당 입장보다는 후퇴하였다. 하지만 집주인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유도는 지금방식과 차이가 없으며 집주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월세상한제도 기약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한 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촛불광장의 요구를 받들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후퇴없이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확충과 주거지원 확대, 땅값? 집값의 과도한 거품제거와 불로소득 사유화 방지대책 마련, 후분양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새정부에서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재벌개혁에 실패하면 제2의 중남미 될 수 있다”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sanpark@snu.ac.kr



19대 대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시민혁명으로 인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이 선출되는 대통령과 정부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분야에서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경제권력이 되어 버린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단절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경유착은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적폐청산은 단지 인적청산이나 일부 인사의 사법처리로 완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과 같은 제도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양극화의 해소를 견인해야 한다. 결국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근본적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과 적폐청산이 동시에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되어 모방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이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박정희 개발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산업의 진화를 단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역작용을 낳고 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도전 기업에게 혁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하청기업들은 가격경쟁과 단가 후려치기에 내몰리고 결국 혁신할 유인도 여력도 없고 있다. 나아가 재벌은 세습을 위해 도전 기업의 싹을 자르고 진입장벽을 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스티브 잡스’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개도기식 정책에만 집착하고 있다.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를 사전적으로 알 수 없는 혁신형 경제에서는 누군가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자의 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경제질서를 나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술탈취-단가 후려치기-노동시장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만 한다. 이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위해서 2012년과 2013년에 단행된 이스라엘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혁 입법을 참고해 볼만 하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약자의 재산권 보호와 재벌 개혁을 위한 제도의 설계자 역할과 공정한 경쟁,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심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도해 스티브 잡스를 육성하려는 정책과 시장을 대체하는 간섭자 역할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행위자로서 정부의 모든 역할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행위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이 들어설 정부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박정희 체제를 연장하는 경제정책을 고수할 개연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 대우조선 구조조정 문제, 가계부채,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등 현안에 파묻혀 과거를 답습하기 쉬운 것이다.

새 정부가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정립하지 못 한다면,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경제 위기와 양극화의 심화가 반복되는 제2의 중남미

가 될 수 있다. 특히 재벌개혁의 성공 여부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것이다. 1910년에 일어났던 멕시코 혁명이 결국 정치세력의 교체만 가져온 채 근본적인 경제개혁에는 미치지 못하자, 오히려 1930년대 이후로 멕시코 재벌은 철용성만 쌓아갔고 멕시코의 경제는 침체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었던 역사적 경험도 있다. 새 정부가 재벌 개혁 시늉만 한다면, 한국 경제와 사회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질 수 있다. 경제 위기관리와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성공한 대통령, 승리하는 국민이 될 수 있다. ☺☺☺





“사교육시장 살리고, 주택시장 챙겨주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정창철 사회복지위원장,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mymetapho@hotmail.com



이번 대선은 예상보다 빨리 실시될 뿐 아니라, 개헌 등 사회전반에 대한 대형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사회복지의 위상이나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각 후보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청사진 제시는 필수적인 과제로 보인다. 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복지 이슈들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가장 뜨겁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는 노동시장 관련된 복지정책과 저출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한정하여 다루어 보도록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된 복지정책의 변화이다.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수요 감소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부터 인류의 절멸을 예상하는 비관론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던 복지정책까지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보험-공공부조의 틀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미시적 접근부터 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시적 접근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복지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논의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실제 기본소득의 원리에 맞지 않는 논의가 지배적이며, 마치

새로운 복지급여의 확대가 기본소득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특정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운영하여 왔던) 수당제도이며, 소득조사를 하고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기본소득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복지정책의 대응이 기본소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수당의 도입이나 실업보험의 확대 등 기존의 틀 내에서도 현재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루어져야 하며, (순수한 복지정책은 아니지만) 최저임금(혹은 생활임금) 확대를 통해서 워킹 푸어를 줄이려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도 대응이 늦었으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조원을 썼다고 하지만, 실제 이를 실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재정여건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던 정책은 마치 가뭄으로 논밭이 갈라지고 있는데 화초용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정책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다소 나올지 모르지만, 15년 이상 출산율이 1.3에 미치지 못하는 재앙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난임부부 지원 등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정책이지만, 저출산의 기본적인 문제인 교육비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보육 문제 등에 대한 대안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1년에 수십조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수당 등의 정책을 새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새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는 생각을 버리고, 획기적인 일가정 양립정책과 주거비 대책, 사교육 절감 방안들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사교육시장을 살리고, 주택시장을 살리고, 민간 보육업자들의 이윤을 챙겨주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 후보들은 저출산 현상이 야기할 재앙적인 미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에 입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



“정치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 세 가지”

조진만 정치개혁위원장,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jmcho7777@hanmail.net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돼 있는 현 상황은 한국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민들은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 농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그것이 촛불의 힘으로 발현됐다.

정치권은 촛불 민심으로 발현된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촛불 정국에서 시민들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가슴에 품고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정치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나 별 관심 없던 시민들도 민주공화국의 위기에 반응을 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입각해 정치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정치개혁을 도모해야 할 것인가? 시민이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다만 다음의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투표연령을 인하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시민들이 투표권은 실질적으로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그래서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가급적 많은 시민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등학생이 투표권을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면 그 우려감을 없앨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투자를 해야 한

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적 능력(IQ)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만 19세 투표연령을 고집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보다 많은,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투표권을 가질 때 정치권은 민주공화국의 이상에 보다 근접하게 반응할 것이다.

둘째, 시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거대정당들은 자신들이 득표한 표와 비교해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 민주공화국의 시민 개개인은 모두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므로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단 한 번의 선거로 1표라도 많은 후보가 당선되는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보다는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가급적 시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정치적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좀 더 비례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통령의 권력자원을 제한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정치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통치권력구조만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인식도 벗어나야 한다. 사실 대통령제가 무슨 죄가 있을까? 헌법에서 규정해놓은 대통령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정치인들이 문제인 것이지,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지만 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삼권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실제로 한국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다. 문제는 청와대, 검찰,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등 정책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권력자원을 제한하고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권자이자 권력자인 시민들이 자신의 눈으로 대통령의 통치를 관찰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시민과 대통령 간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정치는 시민들의 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에 걸 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 주인인 시민을 섬기는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진정한 배신의 정치는 이것이고, 비정상적 정상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

정치개혁

2017년 5월호

“부동산 적폐 해소, 과연 의지가 있는가”

서순탁 서민주거안정보부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stsu@uos.ac.kr



이번 19대 대선은 촛불정국과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적폐청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이 말해주듯, 선거는 제도개선의 전환점이 되어 왔다. 특히 대선은 더욱 그렇다. 정실련은 최근 몇 년 동안 서민주거안정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입법청원, 캠페인, 토론회 등을 통해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과정에서, 비록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으나,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장미대선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 캠프의 정책준비가 충분치 않아서인지 주거안정과 관련된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안보 등 대형 이슈가 등장하고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판을 치면서 시민의 일상에서 중요한 민생분야 정책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지면상 모든 후보의 정책을 비교할 수 없기에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주거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두 후보의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과거처럼 건설부양을 통한 경기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주택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민간 임대시장에 개입하는 문제와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두 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안정화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대해서는 두 당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언론에 비춰지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후분양제 의무 시행에 대해서도 두 당 모두 적극적이지 않다. 이 점은 대선캠프의 공약평가에 참여한 17개 주거시민단체가 내린 잠정적 결론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사회는 경제 및 인구의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등으로 인해 주택임대차 시장이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 저소득계층이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 이상 경기침체나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접근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주거비 부담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세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급격한 전월세 부담의 증가와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정상화되지 못한, 어찌 보면 전형적인 적폐라 할 수 있는 주택후분양제를 전면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실시공과 품질저하를 초래했던 선분양제의 폐해를 일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경기경제

2017년 5월호

“남북관계 잃어버린 9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양무진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yangmj@kyungnam.ac.kr



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제안한다. 국민과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근간이다. 정책 목표는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물류시대 개막, 풀뿌리 남북관계 구축 등이다.

추진 원칙은 소통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3불용 원칙’이다. 북핵 불용, 무력 불용, 일방주의 불용 등이다. 추진과제는 인도주의 문제 해결, 사회문화 교류, 남북기본협정 체결,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접경지역 개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남북중리 물류교류, 풀뿌리 협의체 구축, 북한인권 개선 등 10대 과제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는 남북관계의 잃어버린 9년이였다. 남북관계 복원이 시급하다. 남북 당국 간 불신의 벽이 높고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다.

1단계(2017)에서는 신뢰회복 및 분위기 조성 집중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에 피로감이 쌓여 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을 경계하고 있다. 남한은 김정은 체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은 적화통일 및 군사적 도발행위를 포기해야 양측 간 정치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연락채널 복원, 판문점에서 실무접촉, 특사 상호 교환방문, 10·4 정상선언 10주년 및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과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개최가 필요하다.

2단계(2018)에서는 남북관계 복원 및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하다. 남북관계를 총

괄·조정하는 장관급회담이 개최돼야 한다. 민간급 교류를 통한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재개돼야 한다. 하반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비핵화·평화협정·남북기본협정·새로운 협력 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6자회담 재개도 필요하다.

3단계(2019)는 새로운 협력사업 추진과 정치·군사문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0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사업을 펼쳐야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국군포로·납북자 등 근본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도 이끌어야 한다. 북핵문제는 한미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는 중국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 내 4자 평화포럼 또는 평화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4단계(2020)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한반도 평화시대 선언’이 필요하다. 4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할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6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는 선언(중전선언)도 해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와 병행적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이다.

5단계(2021)는 대북정책 추진 성과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제반문제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다음 정부에 계 인계해야 한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불안정하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이익을 중심에 놓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패권경쟁에 집중한다.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남북 간·북미 간 주고받는 ‘말 폭탄’은 전쟁 수준이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되고 남과 북은 이방인이 된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을 반복할 것인지 새로운 한반도를 개척할 것인지 중요한 경계의 지점에 있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협조자가 된다.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정책’은 소통의 시대정신, 한반도의 이중성격, 평화통일의 미래비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전략이 담겨 있다. 국민과 남북이,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평화 정책’은 새로운 한반도의 개척을 담보한다. ☺☺☺



〈경실련 19대 대선 평가토론회〉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정치사법팀



현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에 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진 19대 대선은 적폐 청산과 함께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의미 속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투표일이 가까워짐에도 각 후보들은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일부 제시된 공약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철학과 비전이 실종된 선거 행태를 보였다. 색깔론, 네거티브 전략 등 구태 선거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력 개혁,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한반도 등 시민들의 염원이 대선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성과는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함에 따라, 77.2%라는 15대 대선 이후 최고의 투표율을 달성하였으며 정권교체를 통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준엄한 심판을 하였다.

〈경실련〉은 19대 대선 바로 다음날인 10일 (수) 오전 10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19대 대선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대 대선 과정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차기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치·경제·사회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조진만 교수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19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장의 사회로 기초발제·토론·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국정 운영〉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외교〉 이해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경제/노동〉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력기관〉 정미화 변호사, 〈사회/복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소통/화합〉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가 참여했다.

양혁승 교수는 이번 대선의 의미를 평가하고 향후 차기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양혁승 교수는 19대 대선이 시민 명예혁명의 결과이자 한국 역사에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들이 가진 기대치가 높으며,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개혁’과 ‘통합’을 꼽았다. 두 과제를 한 번에 풀어나가는 것이 차기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조진만 교수가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기초발제를 진행하였다. 크게 ① 19대 대선과 투표율 ② 대선 결과 ③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④ 대통령 선거 개선방안의 4개 분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19대 대선은 국정농단과 탄핵, 대선 조기 실시, 높은 사전투표율과 투표시간 연장 등 다양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유권자들이 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생각보다 투표율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조진만 교수는 이것이 제도권 정치가 수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이들을 어떻게 공적, 시민의 영역으로 흡수할 것인지 문제제기 하였다.



이어 이번 대선은 시민의 미묘한 선택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을 획득하면서도 2등과의 격차를 역대 최고로 벌림으로써 국정운영에 동력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 번째로 차기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해서는, 시대적 요구사항이 분명하지만 오히려 협치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협치의 딜레마는 국민 통합과 개혁을 모두 이루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지자나 반대 세력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통령이 다양한 제한요소에 의해 행보가 제한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대선과정에서 합의된 정책을 토대로 '정책적인 승리 연합'으로 개혁의 성과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지금이 개혁의 적기이며, 진정성 있는 리더십과 고도의 전략을 통해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대통령 선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제도적인 부분에서 우선 ①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연령 인하를 주장했다. 또한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해당년도 출생자 투표권 부여에 관한 논의, 고등학생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투자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다음으로 ②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필요시 1인 2표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차후 정책선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현재 정당 국고보조금의 30%는 정책 개발 비용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③ 후보자 등록 시 공약집을 같이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국고보조금에 한계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우선 ① 대통령 후보 정책에 점수 부여를 금지하는 것을 개정해야한다.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더 발전적인 토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② 지금의 선거법 규제를 개선하여, 비용을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의미 있는 선거경쟁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③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대한 개선, 자유롭고 심층적으로 TV 토론회 기회 제공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의 후보선택도우미 시스템이 주요 정책 중심의 질문 선별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각 분야별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토론자인 이해정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9년 보수 정권, 특히 정치와 외교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정권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를 어떻게 넘어서는지가 중요하며, 양당 체제의 변화와 87년 체제 극복에 대해 방법적인 질문을 던졌다.

차기정부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과거 한미전략동맹이 군사, 경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미국 트럼프 체제의 등장으로 이러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맹의 제도화에서 거래 위주의 변화다. 이에 따라 극단으로 향하던 기존 한국의 외교정책이 변화하는 한미동맹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변화하는 동맹의 성격에 맞춰 외교 정책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 부재 시에 이루어진 한국의 외교 정책 수정, 나아가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교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이 단순한 정책 나열에 그치지보다 거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에서 재벌 개혁을 주장한 후보 득표율은 총 75%를 넘는다. 국회 선진화법의 제한을 넘는 의석수를 가지기 때문에 경제 개혁은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아직까지 거시적인 경제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개혁의지와 전문성을 가진 인적구성을 통해 바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벌의 일거리 몰아주기, 소유지배구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개혁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행정입법, 시행령 개선으로 대통령이 즉시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고도화, 혁신형 경제 창출, 중소기업의 내실화 나아가서는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임금격차 해소로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 이해정 교수



▲ 박상인 교수



세 번째 토론자인 정미화 변호사는 기존 조직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 방식에 대해 제안했다. 기존 조직체계는 국정목표에 대한 정합성 부족, 정부기관이 대통령 실무부서로 전락했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차기 조직 개편이 확고한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의 수 증설, 대통령 비서실 비대화 방지, 국무총리실 정책조정기능 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①비서실 기능 최소화 ②부총리제도 폐지 ③부처의 축소나 통합 지양 ④공수처 신설 ⑤검찰 권한 조정 ⑥평시군사법원 폐지 ⑦경찰, 국정원 조직 개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여러 방안이 국회 입법개정안에 이미 들어있는 바, 검찰개혁을 비롯한 변화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미화 변호사



▲ 양재진 교수

네 번째 토론자 양재진 교수는 이번 대선이 18대 대선에 비해 복지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지 수요는 남아있고, 사회보장은 아직 뒤쳐져 있는 바, 차기 정부의 복지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구복지제도를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 것인가 차기 정부에 질문을 던졌다. 노년층 복지, 육아 복지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고 이를 개선시키는 것이냐가 차기정부의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 토론자 구혜영 기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시민들이 부여한 촛불의 의미가 대선에서 사라지고, 고질적 지역주의·전형적인 정권교체 프레임만 부각된 것을 비판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평가하면서, 역대 최고 득표율 차, 60%가 지지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1위라는 결과를 분석하며, 차기 정부에게 '개혁'과 '통합'의 과제가 주어졌다고 평했다.



▲ 구혜영 기자



▲ 양혁승 교수

소통과 통합에서의 차기정부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광화문 청사로 이전 등의 물리적 소통도 좋지만 제대로 된 인선을 통해서 '소통이 원활한 정부'가 되기를 주문했다. 또한 제대로 된 협치의 틀을 확립하여, 원활한 의회관계 수립·야당과의 스킨십 강화·국민적 참여 보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박상인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공공일자리 80만개 보다는 경제의 구조적 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거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미화 변호사는 앞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미국 오바마 케어 추진 과정을 바람직한 모델로 들었다. 오바마 케어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동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바람직한 가치 지향을 토대로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진만 교수는 세대·지역 갈등에 대해서 명분을 중심으로 여론형성과 합의를 토대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양혁승 교수는 메시아적 리더십 기대와 각 이해당사자의 타협 없는 주장이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뛰어넘어 차기 정부를 공격 삼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정리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새 정부가 반영해야 할 경실련 19대 대선 정책과제

5대 방향 30개 핵심과제 및 100대 세부 과제

김삼수
정치사법팀 국장
peace@ccej.or.kr

경실련은 지난 4월 6일 '19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우리사회에서 현재 필요한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책들이 공약화되거나 토론돼야 하는지 정책과제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로서의 대안제시이며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에 본격화 할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검증 준거를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19대 대선이 마무리되었지만 정책과제들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경실련의 정책과제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기를 기대한다.

19대 대선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에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함께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국민들의 삶은 고통으로 내몰렸다. 1344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폭증,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35만 명의 실업자, 열악해진 노동환경,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 창궐과 빈부격차 확대 등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 사치스러운 정도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금리인상 및 통상압력이 예상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가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줄 충격의 여파는 너무도 크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은 계속 증가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은 거꾸로 좌절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 부모세대의 재산과 소득의 양

극화가 아이들에게 교육과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는 양극화 전이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시민들은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개혁은 물론,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한반도 등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염원하고 있다.

경실련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제시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 ② 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③ 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④ 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의 개혁, ⑤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포함한 5대 분야 30개 핵심과제 및 100대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기존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강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특혜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 정상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문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와 징벌적배상제·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이 시급하다.

둘째, '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주택 후분양제 의무화 등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을 실현해야 한다. 무주택자이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확대와 공영개발을 강화하고,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 도입도 필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지내몰림 방지와 극복을 위한 대안제시와 무분별한 도시개발 억제와 개발이익환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공공사업의 직접시공제 의무화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낭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확대 등 의료복지를 강화하고, 아동·청년수당 도입, 노인보충급여제도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간 격차 완화도 필요하다.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보장돼야 한다.



넷째, '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자치분권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상향식 공천제 법제화, 정치자금제도 개혁을 통해 투명한 정치에 나서야 한다. 권력구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시민참여를 통한 헌법개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권력기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한 국정원 개혁, 대법관 증원을 통한 법원 개혁 등은 적폐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재정분권, 주민자치 실질화 등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분권 실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다섯째,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단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이 필요한 만큼 이산가족상봉 및 대북 인도적지원 재개 등 관계복원에 적극 나서고, 아울러 법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야 한다. 둘째 개성공단 정상화, 5·24조치 해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넘어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군사적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제시된 정책과제들은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어 온 것들로 사회적 합의수준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경실련의 정책과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국정과제로 선정해 우리사회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확립하길 거듭 촉구한다. ☺☺☺

1.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경제)

과제	세부과제
1.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특혜 청산	1. 기준순환출자 해소 2. 지주회사제도 개선 3. 횡재경영 방지 위한 이사회·감사위원회제도 개선 4. 금산분리 강화 5. 재벌특혜의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과제	세부과제
2.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제도 개혁	1. 법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법인세 정상화 2. 부동산 보유세 강화 3.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4. 주택임대소득의 예외없는 종합과세 실시 5.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에 대한 완전한 종합과세 실시 6. 예외없는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7. 상속·증여세 무력화시키는 기업상속 공제제도 폐지
3. 노동시장 구조개혁	1. 최저임금제도 개선 2. 비정규직 문제 개선
4. 금융감독체계 개편	1. 금융정책기능 통합과 감독 및 소비자보호기구 분리
5. 중소기업 보호	1. 재벌의 골목상권진출 제한 및 중소기업상권 보호
6.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1. 공정위 전속고발권 및 3개기관 고발요청권 전면 폐지 2.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3. 징벌적 배상제 도입 4.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품권법 제정
7. 식량주권 확보 및 먹거리 안전	1. 식량주권의 확보 방안 2. 먹거리 안전과 소비자보호 3. 농가소득 양극화 개선 및 소득향상
8.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1. 사회적 기본법 제정

II. 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주거/도시/공공건설)

과제	세부과제	
주거	1.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실현	1.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 2. 정부의 기본형건축비 인하 3. 주택 후분양제 의무화 및 선분양시 분양예약제 도입 4. 주택 감리대가 예치금제 도입 5. 주택금융의 비소구 대출 확대 6. 주택금융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
	2. 무주택자 주거불안 해소	1. 공공주택 확대 및 공공개발 강화 2. 소득 하위 20% 이하 주거비 지원 확대 3.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 도입
도시	3. 동지내몰림 방지·극복	1. 동지내몰림 방지 및 극복
	4. 무분별한 도시개발 억제와 개발이익환수	1. 무분별한 도시계획 용도 및 밀도 상향 방지 2. 재개발·건축 사업추진 요건 및 개발이익환수 강화



과제		세부과제
공공 건설	5.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와 예산낭비 개선	1. 공공사업의 직접시공제 의무화 확대 2. 공공사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3. 공공사업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종합심사제 폐지 4. 표준품셈 폐지 및 시장단가제 전면 확대 5. 민간투자사업의 특혜 중단
	6. 철도인프라 통합	1. 철도인프라 통합으로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III. 차별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사회/정보인권)

과제	세부과제
1. 의료복지 강화	1.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2.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재정지출관리 3. 의약품 및 치료재료 가격의 투명성 확보 4. 가입자 중심으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 5. 의료민영화 반대 및 공공의료 강화
2. 사회적 약자 지원확대	1. 단계적 기본소득제 도입 2. 보육지원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 도입 3.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는 청년수당 4.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노인보충급여제도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폐지 6. 국민연금의 최저 및 최고 상한 연금제 도입 7.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3. 교육의 공공성 강화	1. 대학의 공공성 강화위한 네트워크 특성화 강화 2.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3.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간 격차 완화
4. 개인정보보호 강화	1.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2. 개인정보 감독권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IV. 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정치/정부)

과제	세부과제
1.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1.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2. 선거연령 하향 3.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4. 선거운동기간 확대 및 선거운동 제한 개선

과제	세부과제
2. 투명한 정치를 위한 당·정치자금제도 개혁	1. 정치자금 후원자 인적사항 공개 강화 2.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3. 상향식 공천제 법제화
3.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1. 상시 국정감사 도입 2.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4. 시민참여의 헌법 개정	1. 시민참여의 헌법개정
5.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강화의 검찰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남용 통제 위한 수사체계 개편 등
6. 법원 개혁	1. 대법관 증원, 변호사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선임서 미제출 변론금지 등
7. 불법행위 근절 위한 국정원 개혁	1. 대공수사권 폐지,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
8. 미래지향적 정부조직 개편	1. 미래창조과학부 개편, 기획재정부 독주 차단, 금융정책 기능의 통합 및 금융감독 분리 등
9. 지역스스로 결정하는 자치분권 실현	1. 분권적 행정구조로의 전환 2. 재정분권(재정권한의 이양과 확대) 3. 위임사무 폐지 4. 주민자치 실질화 5. 교육자치의 실현 6. 자치경찰제 단계적 실시

V.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남북)

과제	세부과제
1.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1.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이산가족 상봉 및 대북 인도지원 재개 등
2. 남북교류협력 확대	1. 개성공단 정상화,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북한 SOC 시범개발 착수 및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남북경제협력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남북 재난공동관리단 구성 등



187개 정책질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답변

유애지
정치사법팀 간사
aejiyu@ccej.or.kr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경실련은 대선 기간 중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87개의 정책을 선별해 후보들에게 질의했고, 답변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87개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 정책질의 : 사회적 관심이 큰 정책 187개
 - 〈경제분야〉 대기업(재벌), 노동, 조세, 농업정책 등 50개 문항
 - 〈정치분야〉 정치, 정부, 지방자치 정책 등 24개 문항
 - 〈사법분야〉 국정원, 검찰, 법원 관련 정책 등 9개 문항
 - 〈통일분야〉 통일, 외교, 안보 등 15개 문항
 - 〈사회복지/교육 분야〉 복지, 교육, 의료 등 31개 문항
 - 〈부동산/국책사업/도시 분야〉 부동산, 공공건설 등 38개 문항
 - 〈소비타·시민권의 분야〉 공공요금, 개인정보, 사회 현안 등 20개 문항

※ O=찬성, X=반대, △기타(입장 유보, 다른 대안 제시 등)

질문	문재인 후보 (당시) 답변
1. 지주회사제도는 그룹 전체 계열사가 지주회사 내에 포함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O
2.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50%이상, 손자회사 이하는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O
3.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자사주에 신주가 배정되지 않도록 소각시켜야 한다.	O
4.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는 신규·기존 순환출자 모두 금지해야 한다.	O
5. 재벌 총수일가의 의결권을 견제하기 위해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야 한다.	O
6. 소액주주들의 권리강화를 위해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을 선임 하도록 해야 한다.	O
7. 주주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O

질문	문재인 후보 (당시) 답변
8. 재벌들이 편법 및 위법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O
9. 금융회사가 대주주의 개인금고, 계열사 지원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를 분리해야 한다.	O
10.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회사 지분의 의결권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O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회사의 5%가 넘는 주식을 예외로 인정하는 특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O
12.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 주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은 현재 평가점수방식에 서 가격경쟁방식(경매)으로 변경해야 한다.	△
13. 시내면세점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O
14.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O
15. 자산과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인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O
16. 현재 관련 매출대비 최대 10%인 기업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더욱 높여야 한다.	O
17.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품목에 대해 대기업들이 진출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O
18.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O
19.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전통시장으로부터의 거리제한 등 규제를 해야 한다.	O
20.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4%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
21. 부실 재벌의 금융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해야 한다.	X
22. 한국은행은 부실기업을 지원하면서 어려워진 국책은행을 지원해야 한다.	X
23.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과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	△
24.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
25.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O
26.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높여야 한다.	△
27. 대부업 대출에 대한 최고이자율(현 27.9%)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현 25%)은 모두 20%이하로 낮춰야 한다.	O
28.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X
29.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O
30. 파견·하청 노동자는 노사협의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X
31.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32. 최저임금 하한선을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O
33.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O
34. 정년은 현재 60세 보다 연장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O
35. 주간근로시간은 현재의 68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X



질문	문재인 후보 (당시) 답변
36. 현재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한다.	△
37.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	△
38.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모든 주주에게 부과해야 한다.	X
39. 명문 장수 기업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기업상속공제제도'의 감면혜택과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X
40.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더욱 인상해야 한다.	○
41. 부동산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42.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과세 특례는 유지되어야 한다.	△
43. 농산물 시장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 기금으로 적립, 낮게 형성되면 기금에서 보전해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
44. 늘어나는 임차농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
45.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농가소득, 농지구묘의 확보, 농업인력의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
46. 농업 직불금은 식량 지급, 농업생태 유지, 농촌경관 유지 등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개편하고 현행보다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
47.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가공식품에 포함된 재료의 원산지를 예외 없이 표시해야 한다.	○
48. 원산지표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49.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	○
50.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
51. 대통령 임기를 5년(현행)에서 4년으로 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개헌해야 한다.	○
52.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
53.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	△
54. 여야가 절반씩 추천해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식과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
55.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	○
56.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
57. 독일처럼 정당 국고보조금을 당비 납부액에 비례해 차등지급해야 한다.	△
58.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다수대표제가 아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
59. 일정직급 이하의 공무원과 평교사들의 정당 당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
60. 현재 금지되어있는 법인(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	△
61. 예산과 결산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특별위원회인 국회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꿔야 한다.	○

질문	문재인 후보 (당시) 답변
62.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수입·지출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
63. 정당의 공천이 상향식(당원 투표, 오픈프라이머리 등)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64. 현행 1년에 20일만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연중 상시 운영해야 한다.	○
65. 인사청문회 기간을 늘리고, 위증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66.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로 당선이 무효화된 사람은 이후 모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
67.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해야 한다.	○
68.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해야 한다.	X
69.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
70.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
71. 기초단위(시·군·구) 지방선거에는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X
72. 총 조세에서 국세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 비중을 현행 20%에서 40%까지 높여야 한다.	○
73. 자치경찰제는 광역 자치 단위로 설치되어야 한다.	○
74.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자치단체장이 교육까지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	△
75.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해야 한다.	○
76. 노동·환경·의료 등 전문법원을 신설해야 한다.	○
77.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	○
78. 대법관 전관예우 금지를 통해 전직 대법관이 영리 목적으로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79.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 기구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
80.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
81.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	X
82.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
83.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폐지하고 독립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한다.	○
84.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
85.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인적, 물적 지원 및 교류를 중단한 '5.24 조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
86.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	○
87.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
88. 북핵문제 해결 전에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X
89.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



질문	문재인 후보 (당시) 답변
90.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
91. 한미동맹에 편중하기 보다는 한중, 한일, 한러동맹 등 균형외교를 통한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92.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
93.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
94. ODA(정부개발원조) 중점협력대상국 명단, 선정 기준과 그 사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95.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여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	×
96.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 수준은 강화되어야 한다.	△
97.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세를 신설해야 한다.	△
98.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
99.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폐지해야 한다.	○
100.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
101. 대학입시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한다.	○
102. 사립대 등록금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
103.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해야 한다.	○
104. 정부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105.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한다.	○
106. 영유아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여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
107. 현재 최고 20만원인 0~2세 양육비를 인상해야 한다.	○
108.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2배(OECD 평균 수준) 늘려야 한다.	△
109.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부동산투자를 줄이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보육, 노인장기요양시설)투자를 늘려야 한다.	△
110. 기초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20만원 → 4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	△
111. 기초연금은 지자체 부담이 아닌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
112.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를 줄이고, 그 재원으로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	×
113. 국민연금기금 안정을 위해 납부액을 인상해야 한다.	△
114. 노후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115.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
116.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
117. 암 같은 중증질환은 국가가 무상으로 진료해야한다.	△

질문	문재인 후보 (당시) 답변
118.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해야한다.	○
119.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
120.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가 아닌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
121.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비만세를 도입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
122.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을 확대해야 한다.	×
123. 국공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여 의사인력을 확충해야한다.	○
124.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병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공공병원에 전면 실시해야 한다.	○
125.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포함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한다.	○
126. 사후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27. 임신중절수술(낙태)를 합법화해야한다.	△
128.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	△
129.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기 때문에 현재 집값의 30% 이상 거품을 빼야 한다.	△
130.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
131.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	○
132. 주거보조비를 받는 가구를 소득 하위 20%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해야 한다.	○
133.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12%까지 확대해야 한다.	○
134.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
135. 주택 임대차시장 투명성을 위해 임대차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
136.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
137.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을 현재의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해야 한다.	△
138.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
139. 공공택지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	△
140. 선분양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6개 세부항목까지 공개해야 한다.	△
141. 선분양을 할 경우에는 소액으로 예약만 하고, 건축물이 완공된 후 분양가와 시세를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	○
142. 현재 3.3㎡(평)당 598만원인 정부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인하해야 한다.	○
143. 정부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의 산출내역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144. 아파트 입주전 분양권을 매매하는 분양권전매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



질문	문재인 후보 (당시) 답변
145. 사업자는 특혜를 받고, 서민들은 비싸서 입주하기 어려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
146.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리츠를 확대해야 한다.	○
147.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건물분양을 확대해야 한다.	○
148.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주택 등 담보물을 넘기면 부채 상환의 책임이 소멸되는 '유한책임대출제'를 1주택자에 한해 전면 시행해야 한다.	○
149. 주택 분양 계약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대출해주는 집단대출을 폐지해야 한다.	△
150. 상가 세입자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세입자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
151. 현행 상가임대료 인상을 상한 9%를 5%로 낮춰야 한다.	○
152. 건물주가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
153. 상가 동지내몰림현상(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위해 대형소매업점의 입점을 제한하고, 지역의 고유한 소매업종을 특화 발전시켜야 한다.	○
154. 올해 만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	△
155.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50%로 상향해야 한다.	X
156.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포함해야 한다.	X
157. 현재 30년으로 규정된 재건축 연한을 5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
158.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지는 민간배각을 금지하고 공영개발해 공공주택을 확충해야 한다.	○
159. 주거안정을 담당할 주거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	△
160. 공공이 발주한 사업장 내 노동자들은 숙련도와 직종에 따라 도시일용직근로자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161. 시중노임단가 조사결정 권한을 건설협회에서 노동조합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	△
162. 100억 이상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은 원도급자가 50%이상 직접 시공해야 한다.	○
163. 예산낭비 원인인 정부의 표준품셈(자재비·노무비 등 1천4백여 항목의 가격 고시)을 폐지하고 시장단가제(실거래가)를 적용해야 한다.	○
164. 100억 이상 공공사업에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
165.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내역서는 인터넷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
166.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비와 운영비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
167.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
168. 환경·노동·소비자 등 모든 분야에 집단 소송제를 적용해야 한다.	○
169. 여러 법률에 나눠져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야 한다.	○
170.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3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X
171.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 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질문	문재인 후보 (당시) 답변
172. 사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인해, 의약품, 의료, 식품 등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무과실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	△
173.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여야 한다.	△
174. 공공요금의 원가는 세부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
175. 경쟁활성화를 위해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의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
176.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
177.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
178.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물을 차단하는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17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
180.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를 완화해야 한다.	X
18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간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감독을 총괄해야 한다.	○
182.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선해야 한다.	△
183.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폐지하고, 운전면허, 사회보장, 의료 등 목적별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
184. 결합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한국형 레몬법 제정 등)	○
185. 청년 지원대책을 주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을 신설해야 한다.	○
186.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
187. 상품권법 폐지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음성적 거래, 소비자 피해 증가, 낙전수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



경실련과 청년들, 19대 대선을 맞아 우리 사회 개혁 과제를 그리다

허재필
정치사법팀 수습간사
heojp044@ccej.or.kr



정의가 시작되는 5월. 19대 대선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다.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법을 고치고 올바른 제도를 확립시키는 변화, 이는 선거로부터 시작한다. 경실련은 이번 19대 대선을 맞아 우리 사회 5대 분야 핵심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알리고, 나아가 대선 후보들이 개혁의지를 갖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이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냈다.

5대 분야 핵심 개혁과제는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에,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특히 전통이 깊은 경실련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5대 개혁과제 공약추구 퍼포먼스”는 2017년 4월 10일부터 14일간 5일 동안 진행되었고,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와 경실련의 젊은 간사들이 합심하여 5개의 개혁과제를 표현하였다.

5일간의 5대 개혁과제 공약추구 퍼포먼스. 이 지면에서 퍼포먼스 당시 열정이 가득했던 현장의 모습을 담아보려고 한다.

[하나. 두들겨 맞는 개성공단, 정상화해서 평화체계를 구축하자!]



#1. 두들겨 맞는 개성공단



#2. 개성공단을 정상화 합시다!!

[둘. 휘청거리는 주거비 부담, 구조적 개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하자!]



#1. 주거비 부담에 휘청되는 청년



#2. “공공주택 확대하라!”

[셋. 권력에 놀아나는 정치검찰, 공수처 도입으로 비리의 끈을 잘라내자!]



#1. 정치검찰과 민정수석, 우리 친한 사이



#2. 민정수석이 정치검찰을 조종



#3. 공수처 가위로 비리를 싹둑!



#4. 공수처 “다 잡았습니다.”



[넷. 찢어진 우산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해서 튼튼한 우산이 되어주길 !]



#1.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2. 부담 가득한 6470원으로는



#3. 찢어진 우산과도 같은 지금의 최저임금



#4. 최저임금 1만원 달성!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듭시다!

[다섯. 보육비에 등골 휘는 부모들, 아동수당 도입으로 보육지원을 확대하자 !]



#1. 보육료 부담에 두 배는 무겁습니다.



#2. "아동수당 도입으로 보육지원 확대하라!"

시민들과 함께한 경실련 19대 대선 오프라인캠페인 현장보기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sub@ccej.or.kr

경실련은 19대 대선을 맞아 오프라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선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정책은 사라지고 비방만 난무하는 선거를 비판하는 '검은안대' 기자회견에 이어, 광화문, 홍대, 서울역, 어린이대공원, 청량리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경실련이 되겠습니다.

1. 광화문



2. 홍대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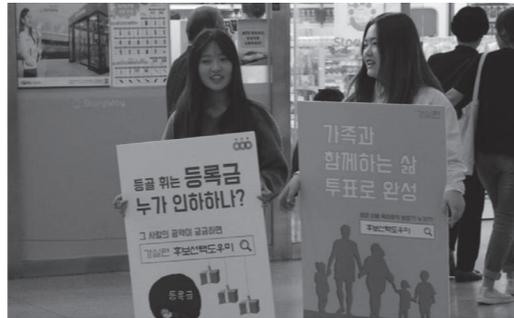
3. 서울역



4. 어린이대공원



5. 청량리역



대선TF 팀장 3인 인터뷰

글 정리 회원홍보팀
사진 권태환 간사



▲ 왼쪽부터 윤철한 팀장, 최승섭 팀장, 유애지 팀장

선거는 후보자들과 선거캠프만 바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공약과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해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이번 대선도 어김없이 누구보다 바쁘게 뛰었던 경실련 활동가들을 대표해 대선TF 팀장 3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유애지 후보선택도우미 운영팀장
- 대선 기간 팀 활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19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를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총 20개의 정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대선 후보들의 답변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위해 각 후보들에게 187

개의 정책 질의를 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 대선 활동중 비하인드 스토리나 아쉬웠던 점 등을 나눠주신다면?

늘 그렇지만 후보들의 답변을 받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각 후보 캠프에 연락해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답변을 받았을 때, 답변이 성실한 경우에는 기쁘는데, 답변이 매우 무성의한 후보도 있어 그럴 땐 매우 씁쓸합니다.

비하인드라고 하면, 모 후보 캠프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후보의 입장은 ‘반대’인데 이상하더라고요. 재차 연락해서 확인했더니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결국 ‘반대’로 수정되긴 했지만 여러모로 황당했던 기억입니다.

- 이번 대선을 평가하자면?

대선을 제가 평가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대선 대응 활동을 했던 실무 간사로서 느낀 점은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의식과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선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민들은 대선 날짜를 바꾸었는데, 후보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느냐”는 것이었거든요. 시민들이 촛불로 만들어낸 대선이었고, 적폐 청산이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받아 실현하는 것으로 경쟁하는 대선이 되

있어야 하는데 정작 후보들 그리고 정치권은 이런 시민들의 바람과 희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만큼 집권 기간 동안 이런 시민들의 열망을 꼭 실현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 처음 팀장 역할을 해보시니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하. 경험이 없다보니 좌충우돌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 팀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입니다.

- 올해는 유난히 유사 사이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후보선택도우미는 어떤 전략과 차별성을 두어야 할까요?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운영해 온 ‘Wahl-o-mat’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입니다. 경실련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동안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도 선거 때마다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선거 때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와의 비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흐름이나 상황에 맞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더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야겠죠. 매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승섭 투표참여 캠페인 팀장

- 대선 기간 팀 활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캠페인팀을 담당했습니다. 대학생



정책선거서포터즈와 함께 경실련의 5대 개혁과제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했구요. 본선거가 진행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시연과 정책선거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대선 활동중 비하인드 스토리나 아쉬웠던 점 등을 나눠주신다면?

기존에 캠페인을 거의 정해져있던 것만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TF를 구성하고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실행에 옮긴 캠페인보다 실행에 옮기지 못한 캠페인이 더 많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팀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면서 타임을 보다가 놓친 캠페인도 있네요. 그리고 과거보다 캠페인 참여 인원은 많이 늘었지만 정작 많은 노력을 투입해 구축한 후보선택도우미의 경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못해 아쉽네요

- 이번 대선을 평가하자면?

정책보다는 이미지가 지배했던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인 정책공약

집도 투표 일주일 전에야 마무리됐고, 정책으로 겨루기 보다는 이미지를 내세웠고, 정책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기 보다는 기존 지지자 결속을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 안에서 공익적 감시자인 시민사회단체가 제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급히 치러진 선거이니 만큼 아쉬운 점이 많네요.

- 캠페인을 통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니 어떠셨나요?

부끄럽지만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가장 약한 부분이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성 있는 운동을 중요시 생각하니 그러한 문제에 직면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중요하다고해서 무조건 어려운건 아니거든요. 짧은 기간 수천 명의 시민분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쉽게, 재밌게 시민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여러 장소에서 진행하셨는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캠페인을 꼽는다면? 이유는?

홍대입구가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과거 경실련은 광화문 등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직장인보다는 대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진행해서 그런지 반응도 훨씬 좋았어요. 딱지치기나 투호놀이 등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분들이 자연스럽게 몰리는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시민들이 많은 곳에서 자주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주축이니까요.



■ 윤철한 SNS 홍보 팀장

- 대선 기간 팀 활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잘못된 구조나 제도, 정책을 바꾸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는 정책을 알리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특히 제19대 대선은 경실련의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정책이 공약되어 제도화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SNS홍보TF팀은 19대 대선에서 경실련의 활동과 정책을 알리고, 시민과 회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SNS홍보TF팀은 저를 비롯해 회원홍보팀, 경제정책팀, 사회정책팀, 시민권익센터에서 모인

7명이 함께했고, 주로 경실련의 정책과제, 후보 공약평가, 후보선택도우미, 투표참여캠페인 등의 활동을 경실련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각종 카페나 커뮤니티, 슬로우뉴스, 오마이뉴스 등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대선 활동 중 비하인드 스토리나 아쉬웠던 점 등을 나눠주신다면?

시민과 회원들에게 우리의 활동이나 정책을 알릴 때, 과거에는 주로 글(텍스트)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되다보니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나 동영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보도자료 등 최종 결과물보다는 활동 과정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제도 카드뉴스로 만들고, 기자회견 캠페인 토론회 등도 이미지나 동영상을 이용해 현장의 상

황을 쉽고 재밌게 알리려고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시민들과 호호하고 참여할 수 있던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겁니다. 단순히 알리는 것을 넘어 시민과 회원들의 생각을 듣고, 그걸 대선후보들에게도 전달하기도 하고 경실련 활동에도 반영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시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후보선택도우미의 시민참여가 떨어진 부분도 아쉽습니다.

- 이번 대선을 평가하자면?

개인적으로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했던 선거였습니다. 촛불민심은 이번 대선에 박근혜-최순실계이트로 인한 적폐청산과 개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선기간에는 이것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갈등으로 정책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마다 일자리, 재벌개혁, 정치개혁, 교육 등 다양한 개혁적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분야별 정책의 연계성이나 청사진이 없고 세부내용도 부실해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나마 촛불민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개혁입법을 제대로 추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올해 대선 SNS 홍보는 이런 점이 달랐다!'라고 자화자찬 하신다면?

잘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TF를 구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잡고 팀원마다 각자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했다고 자평

하고 있습니다. TF활동평가를 위해 SNS홍보팀 활동의 결과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 100개가 넘습니다. 활동기간이 40일 정도이기 때문에 매일 2.5개의 게시물을 생성한 겁니다. 또한 만든 게시물을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한국NGO신문을 통해 더 많은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았습니다.

-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으로 홍보할 때 중요한 부분과 앞으로 경실련 SNS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시민단체에서 홍보라는 개념자체가 부족했습니다. 그냥 보도자료를 내면 기사화되었고, 언론을 통해 시민단체나 활동이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직접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통수단이 만들어졌고 편해졌습니다. SNS가 소통의 수단을 넘어 언론의 역할도 하고, 정책생산과 정부와 기업 감시, 참여와 액션까지. SNS와 온라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은 홍보입니다. 그러나 홍보를 단체 활동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 소통이 중요합니다. 알리고 듣고 활동에 반영하고 참여하게 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천천히 조금씩 발전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다양한 시도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지역유권자운동본부 활동

김승원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pine-sw@hanmail.net

지난 4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가 시작되는 5월’을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했다. 게다가 정책선거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후보를 가려낼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알 권리 충족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된 보궐선거였기에 지역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절실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낳은 적폐의 최대 피해자가 다름 아닌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지역경실련협의회는 중앙경실련과 협력하여 ‘정의가 시작되는 5월’을 함께 만들어 나갔다.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전국 지역경실련이 공통적으로 전개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은 ‘후보선택 도우미’ 프로그램 가동이다.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함은 물론 언론의 보도 협조를 통해 해당지역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 특히 ‘5·9장미대선’으로 불린 이번 선거는 대통령 파면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이다 보니 선거운동기간이 길지 않아 투

표 참여 독려가 절실했다. 전국 지역경실련들은 선거 막바지에 거리로 나와, 중앙경실련이 제작한 ‘후보선택 도우미 안내용’ 물티슈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며 투표 참여를 재고에 나섰다. 결국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26.06%)을 기록했고, 전국 투표율(77.2%)도 16대 대선 이후 최고치였다.

촛불민심에서 비롯된 이번 선거도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색깔론이 횡행했다. 대구경실련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선거부정 및 막말 제보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했다. 이번 선거가 “시간적 제약으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이 횡행하고 인신공격은 물론 헌법 가치마저 부정하는 막말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취한 조치다. 광주경실련 등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도 “촛불이 대선이다!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라”며 “색깔론과 네거티브 선거를 경고한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지역경실련, 장밋빛 지역공약 검증, 깨끗한 선거 구현 등에 나서

정책제안 선거도 돋보였다. 우선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주요 대권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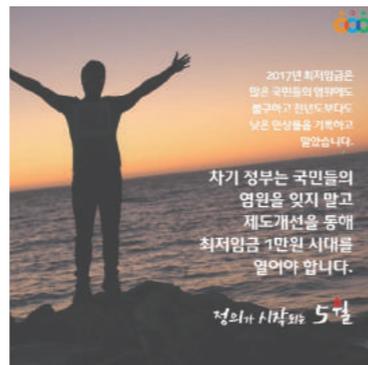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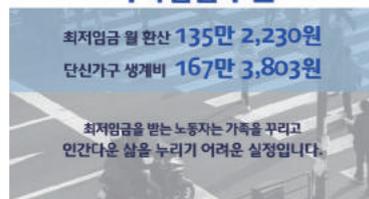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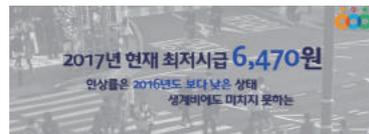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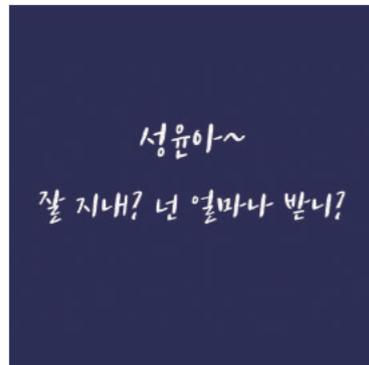
를 상대로 공원일몰제 도입을 질의하는 등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많은 지역경실련이 동참했다. 대구경실련은 7개 시민단체와 ‘5개 정당 대선후보 공약 검증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선거를 유도했다. 인천경실련은 지역 대표일간지인 인천일보와 공동으로 ‘2017인천 대통령선거 정책네트워크’ 협약을 맺고 정책 제안 및 후보 공약 검증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 전문가 및 시민

릴레이 기고를 통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했다. 청주경실련 등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선거 후 대통령에게 국민통합과 공약실현을 위해 노력하라는 논평을 발표하는 등 대선 후속조치도 빼놓지 않았다. 모든 지역경실련이 유권자 속으로 들어가 ‘정의가 시작되는 5월’을 만들어 나갔다. 노고에 감사드린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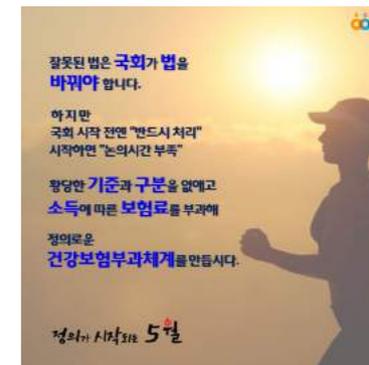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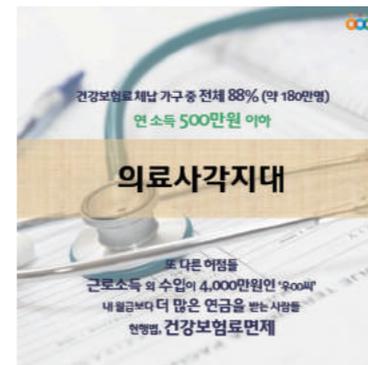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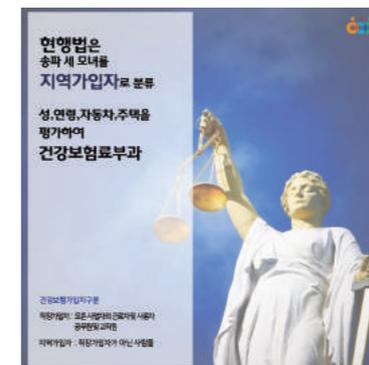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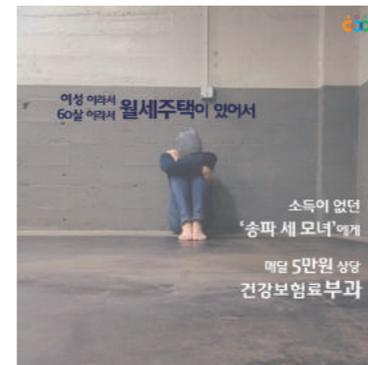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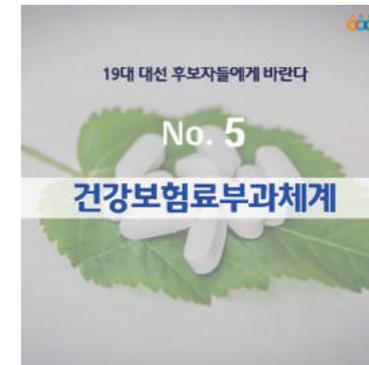
최저임금 제도개선

19대 대선 SNS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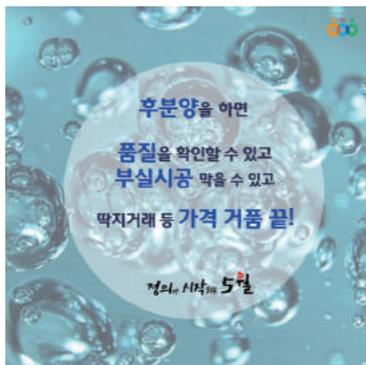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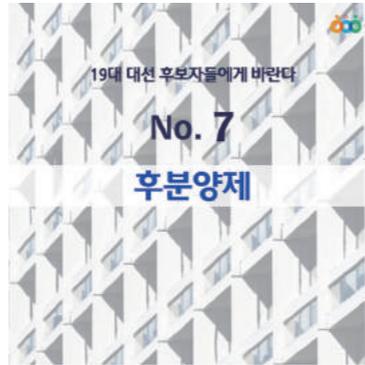
건강보험 부과체계

19대 대선 SNS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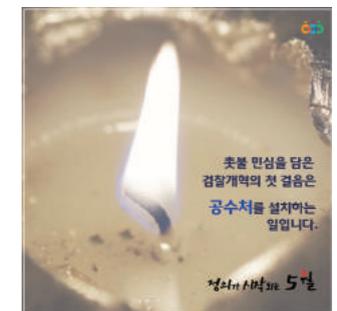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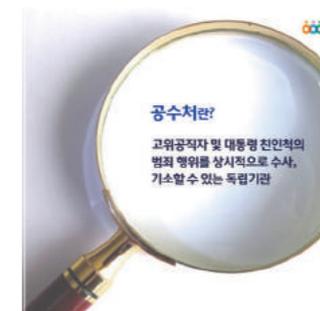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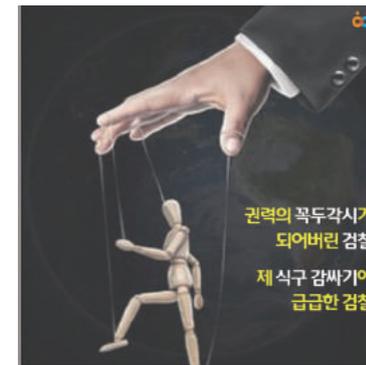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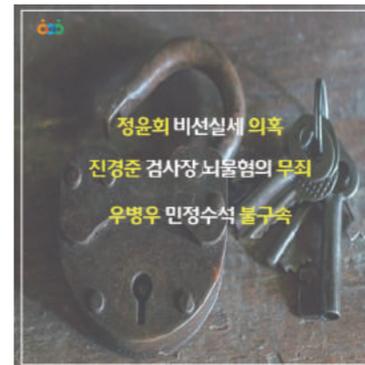
후분양제 도입

19대 대선 SNS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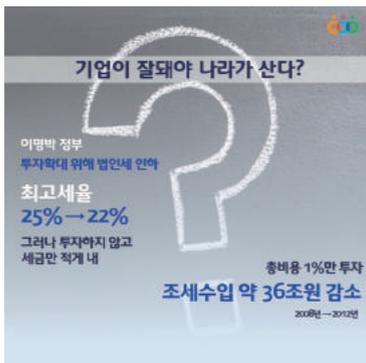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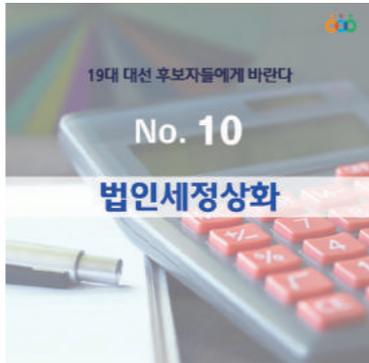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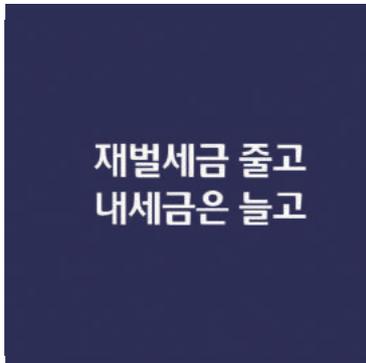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9대 대선 SNS홍보팀



법인세 정상화

19대 대선 SNS홍보팀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홈페이지, SNS를 통해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을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

SNS에서 많이 본 이슈

후보선택도우미 홍보

경실련이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 시마다 운영해 온 후보선택도우미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후보자 교육분야 공약

통일·외교·안보, 일자리·노동, 안전, 사회복지, 교육, 청년, 경제민주화, 4차 산업혁명, 주거, 세계개편·소득불평등 해소, 정치개혁, 사법개혁, 지방분권, 농어업, 소비자정책 등의 분야에 대해 각 후보의 공약평가를 진행했는데, 특히 교육 공약을 가장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박상인 교수 칼럼 “경제적 적폐청산은 어떻게?”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의 경제 칼럼을 비롯 대선 기간 전문가 칼럼을 슬로우뉴스와 공동으로 기고했습니다. 경제, 복지, 정치, 부동산, 통일 분야까지 모두 다섯 분이 써주셨는데 월간경실련에도 실렸으니 읽어보세요.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정창희 | 경실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음
한옥련 | 올바른 경제실천을 통해 복지국가 실현
한바름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보탬이 되고 싶네요. 경실련 화이팅!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cejjustce

전화번호 02-766-5627~5628

Homepage 	Twitter 	Facebook
--------------	-------------	--------------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7. 04

- 04.03 제19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04.07 대법원의 훔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
- 04.10 '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전경련의 정부위원회 참여실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04.10 대선 개혁과제 퍼포먼스 #1_개성공단 정상화
- 04.11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일벌백계하라
대선 개혁과제 퍼포먼스 #2_주거비 부담 완화
- 04.12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부실수사 때문
가짜뉴스 청소법 국회 발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대선 개혁과제 퍼포먼스 #3_공수처 설치
- 04.13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대선 개혁과제 퍼포먼스 #4_최저임금 인상
- 04.14 대선 개혁과제 퍼포먼스 #5_보육지원 확대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 04.16 대선후보 5대 주거안정 정책요구 회신 결과
- 04.17 국정원 '알파팀', 국정조사로 밝혀라
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억' 소리나는 청년주택 중단하라
- 04.19 '법관 블랙리스트'와 사법개혁 저지 의혹, 국정조사로 밝혀라!
경실련 '대선 후보선택도움미' 가동
- 04.20 감사원의 미래부 민간위탁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
19대 대선 정책선거 기자회견 및 거리캠페인 진행
19대 대선 후보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 04.21 04.21 안철수 캠프, 주거·시민단체 정책요구안의 90% 수용 입장 밝혀
- 04.25 04.25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 04.26 04.26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1.통일·외교·안보
04.26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 04.27 04.27 문재인후보,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제·분양제도개선 신중 입장은 아쉬워
04.27 한·미 정부 당국의 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입장



- 04.28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없다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2. 일자리·노동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3. 안전
[19대 대선 공약 평가] 4.사회복지 공약 평가
[19대 대선 공약 평가] 5.교육 공약 평가
[19대 대선 공약 평가] 6.청년(일자리, 등록금, 주거) 공약 평가
정책선거 촉구 캠페인(홍대 걷고싶은 거리)

[경실련·경인연] 19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사이트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김성철
3.30	2.28	3.13	2.78	3.44
가정 3.33 국회 3.17 노동 3.17	가정 2.80 국회 2.90 노동 2.33	가정 3.23 국회 3.17 노동 2.53	가정 2.87 국회 2.80 노동 2.30	가정 3.44 국회 3.17 노동 2.53

2017. 05

- 05.02 [19대 대선 공약 평가] 10.서민주거안정 공약 평가
대선후보들의 철도외주화 관련 답변에 대한 입장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경제민주화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4차산업혁명
주요 대선후보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 발표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청년 공약 평가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세계개편·소득불평등 해소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농업분야
정책선거 촉구 캠페인(서울역 앞)
- 05.04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권력기관·사법개혁 분야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정치개혁 분야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지방분권 분야
19대 대선 후보 187개 정책 비교/분석 발표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평가 결과 발표
- 05.08 정책선거 촉구 캠페인(어린이대공원/청량리역)
투표료 '정의가 시작되는 5월'
- 05.10 19대 대선 평가 토론회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경실련·경인연] 19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사이트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김성철
3.07	1.93	3.37	2.13	3.80
가정 3.20 국회 2.90 노동 3.10	가정 2.00 국회 1.80 노동 2.00	가정 3.33 국회 3.17 노동 2.53	가정 2.80 국회 2.80 노동 2.30	가정 3.80 국회 3.17 노동 2.53

[경실련·경인연] 19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사이트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김성철
3.83	2.42	3.67	1.67	3.58
가정 4.00 국회 3.75 노동 3.50	가정 2.00 국회 1.80 노동 2.00	가정 3.75 국회 3.50 노동 3.25	가정 1.67 국회 1.67 노동 1.67	가정 3.58 국회 3.17 노동 2.53



* 경실련의 모든 성명 및 발표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261명, 가입일 : 2017년 3월 1일 ~ 2017년 5월 10일)

(주)마루농산	김경애	김영수	나진석	박민수	백미경	신영창	이동엽	이정림	임승안	조인형	최종익
(주)아라리오	김경자	김영신	남윤빈	박삼중	백승진	신현규	이동준	이정민	임지민	조종호	하재연
(주)한일종합공사	김구영	김영환	노해룡	박삼희	백종무	심진행	이만춘	이정아	임차남	조진환	한바름
(주)한일종합공사	김군수	김용학	김민준	박석두	빠드지르갈	안호원	이미선	이종원	장영식	조희정	한상윤
강병호	김기남	김재숙	대림유통	박수경	서건석	양승구	이봉형	이준희	장원택	주대하	한옥련
강성호	김대광	김재춘	도경민	박수형	서선자	양태훈	이상근	이지숙	장은주	주희사서하건설	한원영
강현수	김대중	김정일	도승기	박옥선	서승희	연지민	이상형	이지애	전동기	주희사서하건설	한형규
경규현	김덕현	김종우	라운애	박용대	서연숙	염우	이수향	이진화	전지현	지용태	함영옥
경삼수	김동진	김주원	류재욱	박용정	선지연	오미정	이숙희	이찬호	정길재	지우	허남욱
계원종합공사	김동철	김준영	류지봉	박용준	성창기	오미정	이순희	이창수	정동영	차은녀	허성태
고병기	김명해	김창숙	마신혁	박은경	손관구	오세란	이승우	이학철	정상배	천귀선	허순
괘나현	김미자	김창호	문상철(2)	박은영	송상수	오순혜	이시연	이한례	정순배	천세완	허유희
괘영규	김미화	김학균	문화창	박정규	송재경	오희	이영로	이향숙	정연경	천현수	현대건설(주)
구미대학교	김병장	김학준	민수영	박정환	송재봉	유국렬	이운주	이형완	정연주	최상범	현대모비스(주)
구은경	김병철	김한솔	민우기	박지영	송장규	유기용	이을용	이호상	정준영	최상호	현대제철(주)
권경미	김성민	김한태	박기두	박찬규	송진원	유시승	이인영	이홍열	정지영	최순일	현대제철(주)
권봉철	김성일	김형규	박기용	박평식	송포명	유유희	이일용	임미애	정찬영	최운	황영재
권은은	김성중	김형수	박민철	박화영	신경아	윤기희	이지형	임병원	정창희	최원호	황정국
권은남	김상태	김호숙	박문경	방소현	신광진	윤종길	이재민	임보향	조규완	최재수	황진환
기경희	김성희	김홍태	박문옥	배덕현	신권대	이귀숙	이점순	임상규	조미정	최재일	
기아자동차(주)	김애영	김훈	박미라	배천호	신명숙	이길재	이정배리푸드	임석규	조성수	최정희	
김건일	김영선	김희정	박미애	배홍진	신선호	이길환	이정규	임승빈	조원주	최종예	

중앙경실련	강현신	구경이	권준석	김근수	김명철	김상영	김승보	김원욱	김윤두	김정신	김주현
	강혜정	구영희	권준우	김근철	김명환	김상우	김시연	김왕식	김윤석	김정욱	김준
강경수	경민수	구성찬	권찬	김근초	김무준	김상중	김시원	김용남	김문식	김정원	김준배
강내원	계충미	구수정	권철민	김기숙	김문환	김상현	김애자	김용석	김용	김정현	김준식
강덕순	고강석	구자범	권혁민	김기열	김미진	김생수	김양규	김용섭	김은경	김정호	김준영
강마아	고경일	권경우	김경모	김남덕	김민주	김서현	김양수	김용숙	김은경	김정호	김준호
강명구	고영희	권규향	김경배	김남훈	김민수	김석환	김양기	김용식	김은영	김정호	김지연
강문희	고용	권기범	김경수	김대균	김병각	김선필	김영미	김용직	김의수	김정훈	김지영
강민구	고은진	권동현	김경수	김대선	김병구	김선화	김영섭	김용철	김인곤	김종걸	김지현
강선미	고정희	권득용	김경아	김대성	김병수	김성래	김영순	김용태	김인숙	김종근	김지혜
강성일	고지석	권심웅	김경준	김대중	김병수	김성수	김영실	김용하	김인영	김종덕	김지호
강원호	고행산	권상주	김경철	김대현	김병수	김성일	김영은	김용호	김민태	김종록	김진구
강은현	공병욱	권상현	김경환	김대호	김병주	김성중	김영은	김우비	김일수	김종목	김진만
강일환	공정표	권순범	김관영	김대훈	김병학	김성태	김영일	김원석	김재규	김종민	김진명
강주현	공진하	권순식	김관용	김동영	김병호	김성태	김영재	김원준	김재규	김종배	김진설
강지영	공태영	권순용	김광배	김동욱	김보경	김성필	김영주	김원태	김재길	김종섭	김진수
강지현	곽기훈	권영준	김광수	김동환	김보라미	김세정	김영준	김우룡	김재일	김종우	김진아
강창걸	곽복률	권영진	김광현	김래관	김보람	김세라	김영준	김유신	김재하	김종찬	김진현
강창구	곽세별	권오진	김광훈	김만수	김보람	김소라	김영철	김유정	김재화	김종혁	김진호
강창균	곽의영	권윤정	김국주	김만호	김봉진	김소희	김영출	김유진	김재환	김주목	김찬동
강철규	곽지용	권율학	김귀해	김명균	김삼용	김수영	김예승	김유찬	김정국	김주영	김찬석
강철승	곽효석	권일민	김규범	김명기	김상겸	김숙희	김원래	김유환	김정돈	김주영	김찬형
강태호	곽희남	권준기	김규훈	김명임	김상균	김순임	김원배	김윤기	김정수	김주중	김찬호

김창균	김홍규	박기환	박재완	변동철	송인철	양연식	윤경숙	이덕희	이영란	이창섭	장용근
김창범	김홍업	박기훈	박재익	변상해	송태교	양원표	윤기복	이동석	이영범	이창엽	장원규
김창식	김효선	박남규	박정교	변수원	송하동	양윤숙	윤득구	이동석	이영욱	이창효	장유리
김채윤	김효원	박노건	박정민	변재근	신동민	양인준	윤상균	이동주	이영을	이창희	장유환
김천	김희연	박두영	박정석	변창우	신동민	양창우	윤상욱	이동준	이영중	이철우	장은미
김철	김희영	박미나	박정식	서경호	신동애	양혁승	윤숙자	이동한	이영채	이춘수	장중철
김철주	김희철	박미라	박제화	서순탁	신동엽	엄원종	윤영근	이동호	이영현	이태영	장철기
김철호	나권일	박미선	박중근	서승완	신동조	엄인수	윤영천	이만호	이영호	이태용	장형환
김철홍	나병헌	박민준	박중석	서영덕	신동진	여해경	윤은선	이명진	이용만	이태인	장혜련
김철환	나상민	박병오	박중선	서완석	신두철	염규석	윤은주	이명천	이용배	이학수	장희곤
김충환	나준희	박병일	박중소	서윤석	신봉기	염경준	윤인오	이명훈	이용선	이한길	전기호
김치수	남기원	박보성	박중원	서은경	신상진	오상준	윤일성	이모세	이용승	이한민	전대홍
김태균	남상권	박상기	박주은	서정일	신영철	오세정	윤정섭	이민아	이용한	이한섭	전명석
김태균	남원호	박상대	박준수	서종대	신영철	오세호	윤종빈	이병재	이윤환	이한미	전병순
김태균	남재걸	박상렬	박중철	서종철	신완기	오순택	윤종호	이병관	이원식	이현석	전병식
김태수	남현주	박상성	박지원	서직원	신용규	오승훈	윤종식	이봉숙	이원재	이현숙	전봉양
김태수	남호원	박상인	박지은	서한송이	신우현	오용식	윤지원	이봉훈	이원재	이현재	전봉진
김태완	노연경	박서희	박지혜	서한이랑	신은정	오장환	윤진철	이삼열	이원희	이형세	전상룡
김태진	노재훈	박서희	박지호	석기영	신인철	오제명	윤한필	이상룡	이유열	이형희	전상욱
김태현	노정호	박성배	박지호	석철수	신정무	오종현	윤효상	이상범	이윤규	이호경	전성철
김태현	노지주	박성용	박지환	선동수	신지영	오창훈	음유정	이상엽	이윤배	이호섭	전영진
김태형	노희철	박성정	박진순	선종국	신철영	왕경희	이갑수	이소엽	이윤상	이호욱	전용배
김태형	라유희	박성혁	박진아	설원식	신현호	원동환	이갑수	이상우	이윤호	이회영	전용일
김태호	류도암	박성훈	박진홍	설창인	심순혁	원영진	이강운	이상윤	이은기	이회주	전우영
김태호	류동훈	박세권	박창인	성광식	심인석	원재환	이건호	이상윤	이은재	이훈	전장호
김태훈	류시문	박세원	박철수	성금성	심충진	원종호	이경도	이상진	이의영	이희중	정경욱
김태훈	류지성	박수행	박치우	성병화	심해정	원혜영	이경수	이상진	이인영	임건목	정광화
김명진	류형욱	박순기	박태신	성신	이름다운한의원	유관영	이경숙	이상철	이일권	임명호	정덕민
김하양	류화근	박술아	박태영	성윤숙	안경숙	유기석	이경우	이상현	이재길	임서구	정동영
김학수	마경화	박승배	박한용	소경섭	안규창	유기천	이경중	이상희	이재길	임세은	정만중
김한나	마미영	박승상	박한호	소세영	안기정	유기청	이경태	이석규	이재림	임영환	정명환
김해성	맹성렬	박승욱	박행우	소진성	안행억	유기현	이경희	이석기	이재욱	임용기	정명채
김현동	문경식	박승진	박현진	손건일	안병준	유남식	이근섭	이석범	이재완	임용찬	정미숙
김현덕	문광기	박양제	박형근	손무길	안상용	유덕열	이광섭	이석제	이재운	임장원	정미화
김현석	문금희	박영규	박혜란	손봉호	안영훈	유동진	이광용	이석진	이재은	임장규	정범석
김현성	문미란	박영규	박호걸	손성민	안예인	유록수	이광월	이선신	이재중	임종필	정병순
김현수	문상준	박영기	박호영	손성일	안완용	유명진	이광택	이성계	이정남	임창빈	정병오
김현정	문석진	박영남	박후근	손승태	안용식	유병상	이광필	이성구	이정성	임태영	정삼룡
김형규	문세영	박영민	박훈	손재운	안인화	유송	이광현	이성근	이정현	임희청	정삼미
김형균	문소상	박영수	박희령	손정아	안정혜	유연희	이규용	이성복	이정희	장경완	정석희
김형조	문인섭	박영수	박희선	손종보	안종범	유인상	이규철	이성욱	이정희	장경태	정선철
김형준	문장협	박영웅	박희연	손호중	안지현	유인환	이규혜	이성재	이종규	장동민	정선혜
김형진	문차호	박영철	박희진	손희준	안진걸	유일용	이규성	이소영	이종길	장문호	정성봉
김형진	문태현	박영환	방승범	송강욱	안철원	유재민	이근식	이승수	이종범	장미은	정성심
김혜경	문현정	박용석	방정혜	송경성	안현구	유재욱	이근태	이수연	이종수	장민수	정세진
김혜숙	민남미	박용준	방중수	송기민	안효정	유재중	이근환	이수영	이종윤	장병호	정세훈
김혜순	민병욱	박우석	배영환	송디겸	안희숙	유재혁	이금희	이숙희	이종은	장보름	정승상
김호	민수영	박원규	배유아	송미영	안희정	유종성	이기송	이순기	이주하	장석림	정승준
김호	민희숙	박윤수	배인명	송병록	안희철	유평준	이기우	이순배	이주형	장석춘	정승화
김호경	박건영	박은아	배장수	송수영	양광희	유해신	이기용	이승대	이준영	장승진	정연섭
김호균	박경서	박은현	배중석	송용석	양대규	유항일	이기호	이승섭	이지영	장성영	정연태
김호성	박경준	박용순	백복수	송원기	양두석	유혜영	이낙원	이승우	이지훈	장영성	정영민
김호성	박광환	박의용	백요한	송은우	양석영	유희동	이남경	이시연	이진경	장영오	정왕규
김호연	박기영	박인선	백정숙	송인섭	양정범	유희숙	이다혜	이신호	이진영	장영환	정용화
김홍관	박기철	박재갑	백진현	송인운	양세영	윤건수	이대영	이애화	이진원	장용숙	정운수



천홍석	김재훈	이태동	홍기원	김미자	제일환경(주)	김명혜	문효상	양원규	이진현	최원아	김재경	신창호	장형근	권인철	박소옥	이영춘	한승주	김경일	김쌍우	김태우	박선아	서현식	심미예
최남식	김종배	임은기		김영로	조승현	김무중	박갑석	엄봉훈	이진희	최은영	김재석	신현진	장화식	김경욱	박승채	이유리	한태연	김경조	김영길	김태희	박성수	서효정	심상조
최성중	김종율	임재권	군포경실련	김옥순	조용문	김민한	박경욱	엄인용	이창건	최종만	김중구	신희권	전국진	김경철	박승욱	이인수	홍건숙	김경택	김영신	김학진	박성철	석승희	심상구
최영남	김준희	임주석		김용훈	조용석(명신회)	김민희	박동규	에스제이건설(주)	이창용	최준호	김종선	신희영	전영춘	김관욱	박영용	이재광	홍국선	김광식	김영아	김해용	박성호(2)	석진열	심윤정
최용석	김진익	장기태	곽윤열	김종열	조종석	김미화	박동균	여우현	이태용	최한경	김종하	심영주	전학구	김광배	박용묵	이정진	홍근표	김길수	김영옥	김해영	박성훈	석태호	심인섭
최윤정	김진희	장도익	국정아	김준현	주해(대한인민회)	김민석	박동환	여은상	이해숙	최한석	김주홍	안병진	정대용	김광창	박인용	이종화	홍석준	김남식	김영옥(2)	김현욱	박승제	선석렬	심형철
최정구	김철광	장문석	군포위생(원성회)	김진희	채신덕	김병규	박병준	여택동	이형태	최혁재	김진숙	안영찬	정상배	김기권	박정석	이찬식	홍순길	김남일	김영종	김현재	박시우	설광석	심해인
최주영	김현미	장세광	권영훈	김창집	최영미	김상돈	박병철	오경학	이호석	하경태	김진중	안재준	정상훈	김대근	박정희	이천호	홍진표	김대래	김영주	김형권	박영봉	설호석	이영아
최진규	김취연	장종길	김대욱	김철경	최재용	김상진	박병호	오미영	이희영	하순화	김창근	안중훈	정상래	김명진	박종범	이한경	부산경실련	김도	김영섭	김혜경	박용주	성민수	안명석
하성택	김휴진	장준우	김동별	김형창	한성식	김성동	박상원	오병찬	임종오	한상인	김창숙	오세현	정승래	김명철	박종석	이현중	김동영	김용원	김해경(2)	김용원	박용한	성병창	안문상
하주아	김희덕	장홍성	김석현	남기후	한재혁	김선왕	박승철	우동락	장석희	허남결	김춘길	오원관	정우택	김문재	박종철	이형오	(주)경성에너지	김동호	김용필	김호범	박재본	성영미	안병록
한국수출입은행	김희철	전유한	김연승	남익선	한해경	김선희	박영식	우형택	장영규	허인설	김충신	오중섭	정인구	김민희	박주이	이형완	(주)부산은행	김명석	김원태	김홍재	박재욱	손병열	안연균
한명석	나효훈	전재돈	김영희	도현순	허우섭	김성곤	박은영	유성근	장우석	홍희청	김태연	오학석	정중훈	김보현	박창수	이홍성	강경태	김명섭	김유경	김홍태	박재현(2)	손봉주	안원하
한생	노상진	전호갑	김중수	류문식	홍석만	김성수	박재열	유성호	장은숙	황광석	김태현	우금옥	정헌재	김상원	박창윤	임종석	강규성	김문규	김유석	김홍휘	박재홍	손상용	안원호
한신구	라병희	정재봉	김창호	문태식	황인문	김성준	박종률	유영환	장철규	황귀선	김태형	원용철	정희대	김선실	박철수	장미	강대영	김미향	김윤영	김홍태	박정구	손순용	안재민
한희주	박성도	정진수	김희모	문현미	황인순	김성택	박종익	유왕근	장해열	황병일	김태호	유병연	조상천	김선홍	박한호	장종국	강미라	김백철	김은숙	남태	박정숙	손영일	안종일
허기석	박성표	정택균	럭키빌딩	민경환		김수원	박종철	윤동섭	장호경	황영철	김태훈	유병한	조용석	김성두	박해령	전종국	강민석	김병곤	김은영	남기찬	박종덕	손정현	양대건
허문수	박순이	정택동	박정민	박광근	대구경실련	김승환	박준상	윤태우	장호열	황정현	김현호	유인규	조윤제	김성철	박혁진	전철균	강민수(2)	김병기	김인한	남경호	박종수(2)	손정환(2)	양동열
허성태	박응도	조경래	박종수	박병돈	김민호	김신호	박진수	윤현식	전상훈	황중숙	김현하	유인규	조은호	김수경	박현희	전철영	강민정	김병용	김인환	노경조	박주연	손창우	양시경
허탁	박재욱	조현수	박희찬	박상석	(주)비커유케이즈	김영권	박치상	윤홍식	전성욱	김형태	김형태	윤여진	조흥희	김승호	박홍식	정만준	강병석	김병하	김장섭	노상훈	박준순	손창우	양원석
형민우	박정구	지대근	석경수	박영훈	감신	김영모	박한승	이강태	전영권	대전경실련	김해천	윤주병	조흥범	김신규	배상기	정명오	강병호	김보영	김재만	노영옥	박진성	손치훈	양은진
홍영신	박주영	최애	송정복	배건웅	강연환	김용두	배기만	이경오	전영선	(주)동그랑	도남선	윤태희	조혜형	김영태	배영철	정병수	강성권	김복준	김재명	노일용	박진일	송교욱	양재화
황동현	박형진	최낙필	심재숙	백종일	경희창	김용찬	배명길	이경택	전영평	(주)동그랑	도남선	이건희	주정봉	김예영	백재봉	정삼수	강성태	김봉국	김재일(2)	도한영	박철중	송문숙	양종철
황보관석	백승국	최선호	안중호	신명순	계양연진종합상사	김용철	백석운	이경화	전재호	강다은	명을식	이계자	장영자	김정민	서이채	정승임	강시명	김봉규	김재찬	류갈필	박철한	송미경	양종필
황윤용	변창우	최연호	오은정	신상천	공영선	김윤호	배은정	이광오	전형수	강명자	문경재	이광자	진동규	김정아	손미란	정영창	강예운	김부근	김재훈(2)	류위훈	박태주	송순임	엄세원
황주안	소평진	표상욱	오태화	심상용	공재식	김재범	백승호	이근원	정경선	강병규	문정수	이광진	진동섭	김종숙	송미승	정준기	강유동	김분이	김정량	류은영	박한규	송원섭	오병루
	송창호	하영백	유애순	안호열	곽득환	김정렬	변규현	이기훈	정문정	강재규	박경오	이동민	차정민	김종익	송영중	정진대	강유창	김삼문	김정민	류중성	박한욱	송은주	오상준
구미경실련	송철원	허진	이정은	양영재	곽동주	김종건	변부형	이노수	정성윤	고나현	박근영	이문지	최경호	김종호	송진호	정명국	강재호	김삼수	김정수(2)	류진호	박희영	송재광	오상환
	신미정	홍인수	이광석	여중석	구미대학교	김중웅	서영대	이도연	정순천	고희경	박기남	이범규	최경훈	김창세	송홍범	정해수	강정규	김상길	김정숙	모상선	박희정	송재은	오세룡
강명천	신주식		이상준	엄선덕	권기혁	김중태	서정걸	이도현	정연욱	구범학	박기용	이범승	최정우	김창세	송홍범	정해수	강정규	김상배	김정순(2)	문규성	방성애	송정숙	오연석
강승수	김재필	군산경실련	이상준	오미애	권기혁	김중태	서정오	이명호	정영모	구범림	박상훈	이범승	최정우	김창세	송홍범	정해수	강정규	김상배	김정순(2)	문규성	방성애	송정숙	오연석
강신웅	심재필		이성진	오인순	권은남	김지현	서종철	이미석	정영은	권은남	박상진	이성일	최미경	김태현	신관용	조기석	강종목	김성옥	김정택	문명순	배광효	송종두	오영자
고영호	양남숙	(주)김장독	이선덕	오흥미	권동일	김진호	석정태	이병화	정은숙	권철명	박영순	이승용	최봉문	김민조	신재범	조상국	강태문	김상태	김정현	문상철	배성훈	신경근	오지영
구자근	양진오	(주)제부두제사연구소	이유설	웅심이칼국수	권병훈	김창수	성수환	이병희	정재근	김기남	박종대	이영수	최창환	김하성	신주환	조성익	강필원	김상호	김종곤	문운순	배수미	신군재	오철조
권구일	엄상섭	100인경관트러스트	이희재	원용벽	권오숙	김찬일	성영락	이봉우	정제영	김기범	박종석	이용훈	최정우	김홍석	심재경	조순형	강현주	김석준	김종구	문재천	배종출	신대량	오태석
권보	오영재	OO(주)군산공장	임구원	유영록	권오준	김태선	성윤상	이부용	정창길	김길순	박준혁	이윤행	한경이	김희환	안영하	조영교	강형숙	김석호	김종기	민지훈	배종출	신동욱	육성애
권순서	윤달근	강왕근	정순환	윤영자	권윤집	김태수	성창환	이상록	정태완	김동선	박준형	이인세	한기평	노경운	양명희	조영석	경규성	김선년	김종민	박경주	배해래	신동윤	육진우
권윤택	윤상훈	고계근	정경조	이경화	권택중	김태우	손광락	이상천	정한영	김동철	박희조	이재민	한성림	명근홍	양승희	조용호	고명석	김선미	김종한(2)	박관수	배화숙	신만석	왕인
길윤옥	윤종석	고덕영	정태영	이경희	권휘동	김태환	손상덕	이상필	정희교	김명경	방명덕	이재영	한성숙	모청용	양영주	조준범	고인홍	김선희	김주영	박관수	배화숙	신만석	왕인
길호양	이관순	군산도시가스	조용석	이금순	기일형	김해철	손상훈	이상화	조동환	김명제	방정희	이정구	한화교	문영덕	양판승	차경아	고재일	김성권	김주현	박길희	백병효	신상구	우성철
김경훈	이덕수	군장에너지(주)	조은정	이기형	김성민	김현수	손수익	이석형	조락현	김병주	배동국	이중범	황의달	문웅	어성준	천병식	공정연	김성근	김주호	박남희	백해량	신수진	우정용
김낙관	이명숙	김영혜	조재용	이두열	김강식	김형수	손승안	이선혜	조방희	김병국	백정웅	이철은	황재익	문준석	오승주	천재관	공병승	김성길	김주희	박도영	변영호	신승균	원허
김도형	이명희	문영수	최수희	이부형	김경민	김효진	손영호	이성	조상제	김상환	서동국	이학재	황해정	민경준	원요준	천현중	곽원병	김성수	김준기	박도범	부두봉	신영호	원희연
김동욱	이미경	물빛가운	최경용	이임순	김국태	나승춘	송상수	이성철	조영도	김성민	서영석	이해정	이현대	민찬홍	유경생	최명숙	구명중	김성열	김준환	박우춘	서경국	신용삼	유영길
김동환	이미숙	박은아	최총식	이재홍	김대식	남동강	송순임	이수원	조용원	김성민	서영완	이현대	이현숙	민찬홍	유경생	최명숙	구명중	김성열	김준환	박우춘	서경국	신용삼	유영길
김문환	이상도	심규만	한성수	이정규	김대진	남윤환	송영식	이수호	조인지	김양호	서재열	이현숙	이현호	민찬홍	유경생	최명숙	구명중	김성열	김준환	박우춘	서경국	신용삼	유영길
김보준	이성철	양창진	호희국	이정수	김도영	남인철	신영섭	이연재	조정학	김영기	서정원	이현호	이현호	민찬홍	유경생	최명숙	구명중	김성열	김준환	박우춘	서경국	신용삼	유영길
김봉교	이영애	원유환		이종기	김도한	남정근	신홍권	이용세	조진현	김영주	서형호	이현호	이현호	민찬홍	유경생	최명숙	구명중	김성열	김준환	박우춘	서경국	신용삼	유영길
김연고	이원재	이희	김포경실련	이종준	김도형	노영희	심병철	이장수	조찬호	김영희	성기석	이회영	강병조	박석일	이명희	최재경	권범현	김성훈	김진현(2)	박민우	서봉원	신철성	유재중
김요나단	이원희	전강훈	(주)신원렌터카	이종재	김도형	노윤경	심준섭	이재일	주태환	김욱	손대근	임경수	강성태	박석일	이문희	최종명	권오성	김성훈(3)	김창희	박복용	서수금	신총기	유정기
김윤희	이정진	조경민	강영자	임학현	김동석	류규하	안병천	이정웅	진연수	김원희	송영환	이정웅	임유택	박성진	이범수	최호길	권재현	김세한	김철도	박봉수	서양수	신해송	유정동
김은희	이재수	최웅	김남규	정일환	김동일	맹일영	안영석	이종경	차진근	김은주	송유숙	김인순	장복수	박세훈	이병채	최환석	권태섭	김수미	김태덕	박성명	서종석	신환승	유제현
김인순	이종률	한화에너지	김두관	정해원	김동철	문상돈	안정향	이지영	최동학	김용배	송인걸	김인순	장인성	박소영	이상권	하상복	김가야	김수빈	김태경	박상수	서창근	신현무	윤강훈
김재욱	이창형	홍관표	김문경	정희상	김영수	문인수	안화석	이진태	최우곡	김인철	신선호	장준수	곽경배	박승춘	이상로	한상호	김갑환	김수자	김태구	박석원	서현수	신해숙	윤경만



윤기혁	이시화	장윤석	정지금	최보규	김미심	김유리	박정민	유영창	이현녀	최택수	김석규	박익중	윤두천	정성균	강성민	김경숙	박경중	이병욱	하혜경	박석두	이지연	강용원	제성명
윤나영	이영갑	장은선	정패영	최선아	강석태	김은희	박종갑	유종완	이현미	최형덕	김석진	박재관	윤미경	정수진	강철호	김경애	박경태	이상현	한미현	박수경	이철규	고용국	제윤경
윤상미	이영신	장재구	정대호	최성관	강신길	김인섭	박종학	유주희	이호석	최혜경	김석진, 자문	박재순	윤희경	정순옥	김미정	김기범	박금자	이선희	한수연	박수형	임다정	공성식	조현혁
윤상현	이영호	장준홍	정하윤	최수미	고돈일	김일환	박종현	유혜정	임정길	최호섭	김선혁	박정화	이경섭	정순혜	김선명	김기희	박기욱	이숙경	현유경	박순영	임승기	권인홍	주춘
윤석준	이옥형	정지태	정한성	최수영	고선창	김재학	박종훈	윤광훈	임종희	추종권	김성연	박재현	이경환	정양훈	김성준	김대일	박동신	이숙란	홍천호	박옥경	장승희	권진구	천상국
윤석진	이용주	정해욱	정해균	최승환	고영진	김정식	박준범	윤규식	장경민	탁동철	김시영	박준배	이국희	정연규	김윤아	김동인	박상호	이양주	홍경남	박은정	장영달	김동식	한병세
윤성미	이원경	장희정	정해명	최영주	고인선	김정아	박희식	윤기순	장근호	홍일태, 김광민	김연기	박진경	이금희	정원제	김중선	김명연	박성진	이옥례	홍창표	박장수	장은혜	김동채	한옥희
윤수성	이위덕	전보익	제미경	최원석	고종문	김정인	반영덕	윤신남	장영석	하성란	김영기	박태경	이길영	정자홍	김준호	김명희	박승렬	이옥희	황연화	박태원	전미옥	김미소	한해광
윤영태	이은진	전세표	조래영	최원용	고현주	김정환	방대식	윤재훈	장봉주	한살림	김영래	박현웅	이명욱	정종훈	김지훈	김민	박은호	이용진	양평경실련	방민경	전재은	김숙자	홍춘식
윤재성	이은화(2)	전용배	조명래	최은주	공정관	김정훈	변성수	윤재희	장성원	한상민	김영수	박현순	이민규	정태정	김태호	김병재	박정희	이용천	양평경실련	방민경	전재은	김숙자	홍춘식
윤재철	이을찬	전우철	조명제	최재명	곽병용	김종담	변인미	윤정은	장은선	한성희	김영태	박화진	이범주	조경두	김현덕	김복희	박종호	이정미	양평경실련	방민경	전재은	김숙자	홍춘식
윤정선	이일용	전일수	조문선	최재호	곽종환	김종윤	서영기	윤준	장재수	한정숙	김완동	박홍덕	이병홍	조규만	나창수	김상혁	박준연	이정민	강대우	배연정	전종덕	김영표	이천여주경실련
이갑준	이재정	전정호	조민주	최정욱	길목	김주철	서은진	이건욱	장재환	함국기	김용석	배금란	이상명	조병모	매일식품(주)	김성봉	박태순	이정아	강병국	서동일	정경숙	김유성	강경모
이강진	이재호	전진영	조상현	최종해	김 철	김준섭	석명환	이겸호	장주열	함준식	김용일	백창수	이상해	조석환	박재현	김세영	박해부	이주옥	강신우	서시은	정남선	김정선	강석립
이경학	이정민	전현수	조상희	최준식	김경석	김진태	선영복	이경상	전용성	허우린	김용철	백승유	이성호	조승백	박철우	김세원	박희경	이창수	구민진	서진숙	정연준	김종구	강성수
이광열(2)	이정식	전오열	조양래	최찬규	김경순	김진태	소문섭	이경애	전이령	홍련암	김웅	백혜련	이성희	조은석	비손이앤씨	김송철	백영국	이천환	권수연	성종규	정영수	김현태	강승균
이광원	이정주	정광현	조영규	최철원	김경아	김진희	손병성	이관	정문교	홍명관	김은하	변수정	이수행	조형훈	서용현	김안식	서근식	이필상	권오병	송영현	정주영	나형선	강신욱
이귀순	이정향	정권영	조용규	최혜경	김계남	김진희	손재복	이기원	정봉재	홍인숙	김인석	변영선	이승호	조화윤	신현일	김영림	서정열	이해나(하용녀)	김경수	신민희	정하성	문상엽	강영애
이규현	이정호(2)	정근	조용연	최희원	김나영	김천수	송경희	이대길	정상철	홍전희	김재기	서경희	이영인	주영훈	오정록	김영숙	서혜경	이희대	김경희	신소봉	조경숙	박영규	강정순
이남기	이정환	정기섭	조용한	탁영민	김남춘	김철수	송제철	이대복	정순희	홍천동	김재성	이성범	이영재	지순이	위미영	김영희	석진성	이희연	김광윤	신승한	조소연	박성현	강창영
이남중	이정훈(2)	정달식	조우장	정하연	김대용	김철환	송종철	이문섭	홍해용	김재욱	유영필	서수정	이영주	진송주	김승필	김윤재	설진순	임명자	김대우	신정원	조재국	박승희	고창애
이덕식	이제숙	정도영	조은득	하상철(2)	김동수	김춘식	신대성	이문규	정용주	황보해용	김정희	서정근	이영호	최문태	윤석미	김은주	성준모	임현규	김동운	신희정	조춘선	배신주	고옥자
이동률	이조경	정동만	조은환	하성훈	김동순	김충남	신선익	이문성	정원모	황시영	김종석	서정욱	이운창	최석환	이금호	김정란	손상경	장동근	김동현	안경모	조항욱	삼남석유화학(주)	고윤지
이동원	이종석	정동영	조은아	하소영	김말순	김태균	신영근	이문영	정윤희	황영필	김종선	서환	이원욱	최영숙	이복남	김정복	송기범	장동일	김명숙	안영일	조현주	삼남한사령봉사단	고인정
이동윤	이종원	정말순	조은정	하순금	김명섭	김태영	신재민	이미경	정은희	황은숙	김종오	서흥석	이원재	최영희	이상취	김제동	신남균	장미진	김명주	안은경	조효미	서영남	공미선
이동일	이종철	정영길	조재형	하주수	김명욱	김형걸	신종출	이병선	정진용	김정희, 김문수	김종오	성기원	이윤규	최인수	이욱기	김종길	신동국	전준호	김명해	안정희	진광규	서진호	구경혜
이동진	이종화	정명식	조종석	한국올리브(주)	김문석	김형기	신창승	이봉진	정홍기	수원경실련	김준혁	성현구	이의봉	최인자	이중철	김종일	신병철	정명숙	김영희	염숙자	채 현	서호영	구준모
이동훈	이주환	정영영	조지혜	한기성	김미정	김효준	신현식	이상정	조광덕	조광덕	김지란	손혜정	이재득	최진학	이천오	김지영	신윤관	정세진	김민섭	여병찬	채종묵	성수미	권광일
이동희	이준승	정명희(2)	조홍규	한병무	김병욱	김희근	신홍식	이상호	조명수	주형진, 최영욱	김진한	송원찬	이정현	최진환	임승규	김지훈	신정환	정승현	김민정	여병정	천귀선	송승하	권순원
이만수	이진수	정문수(2)	조효재	한병철	김부석	남상진	신홍사	이수영	조성열	김미경	김종관	신경환	이정하	최찬호	장동식	김창모	신청하	정안철	김선자	염창	최광호	심경택	권영미
이명식	이진수(2)	정미경	주수현	한성국	김상기	노금희	심삼목	이승재	조현국	강민철	김태선	이동섭	이종섭	하만호	정순관	김철하	심규호	정연주	김수은	오성탁	최경호	심재수	권영진
이미경	이창희	정미한	주식회사무학	김선일	동병희	심연홍	이연우	이연우	주영래	강유정	김태학	신지훈	이종만	하순진	정옥석	김철환	양근서	정용기	김양수	유영표	최두영	안성용	권영훈
이민호	이창재(경	정민재	주안나	한영수	김선철	라윤일	심화섭	이열호	주용현	강인선	김혜영	신한미	이종주	하은미	정은희	김초환	양태호	정은수	김연호	윤덕규	최석운	오경섭	권오섭
이병기	성유암)	정상문	주영숙	한재철	김성권	문제용	안경수	이영선	진장수	강학천	김현구	심재광	이주연	하창호	주지은	김준욱	양현석	정은식	김영범	윤수영	최소영	오승석	권우주
이병진	이춘구	정순영	주재민	한중석	김성근	민현정	안세준	이영수	진형배	강희정	김현태	심현자	이주현	한경수	한지은	김춘호	오관영	정은혜	김영선	윤정원	최영식	윤주현	권진형
이병호	이학봉	정순일	지경아	함라연	김성미	박경미	안종석	이영순	천성미	강희진	김혜련	안혜영	이진성	한국지	한고(임승남)	김태훈	오남숙	정이진	김영환	윤종대	최영준	윤현희	권혁봉
이봉진	이현민	정신오	지은아	허민도	김성욱	박경심	안종원	이우영	천성필	고기준	김해숙	양우혁	이찬용	한상울	홍상우	김해만	오은석	정정순	김용란	윤형로	최창규	이문식	권혁중
이상구	이현우	정애니	진동식	허진욱	김성울	박경자	양연석	이운연	최관식	고병역	김호근	양재철	이창모	한옥자	황금영	김현삼	오정순	정주호	김용준	이광자	추은경	이식	권혁중
이상미	이현재	정영점	진수진	허해녕	김수근	박계화	양영희	이은희	최근식	구본숙	김훈	양진하	이창진	한창균	황의병	김현호	오진호	정진욱	김일구	이그루	허보균	이원두	글정하
이상백	이현주(3)	정용성	진효상	현지훈	김수정	박근철	양진욱	이인숙	최길순	권후남	나민수	염규용	이판수	한창석	황인용, 김광민	김형욱	오현주	정철욱	김정화	이길한	허여령	이유형	기보중
이상은	이훈전	정용수	차동박	홍경자	김순복	박덕희	양해준	이재선	최돈환	김경수	나태성	예인기	이필근	한봉교	안성근	김혜숙	오현주	제종길	김주남	이대형	허윤희	이정희	김 준
이상진(2)	이희길	정우진	차동욱	홍봉선	김순복	박만용	어주하	이재정	최동권	김경호	남택진	왕은석	이해균	허성균	안산경실련	김혜영	왕은희	조경래	김지혜	이동연	홍성현	이정원	김강용
이상택	이희전	정은선	차진구	홍일표	김승길	박영중	엄경선	이재홍	최동훈	김기한	명홍진	오민범	이현순	허재구	김경호	김호득	원미정	조안호	김진영	이동준	홍승희	이철	김강산
이상현(2)	임무진	정상한	차창호	홍중인	김승숙	박문수	엄현수	이승식	최서호	김도형	모성은	오세환	이희수	허헌태	강기성	김화궁	윤상민	조재기	김창현	이명규	황규영	이평호	김경건
이선희(2)	임우택	정재동	천상수	황국자	김승철	박병훈	엄태영	이중식	최성주	김동선	문소심	오완석	이희숙	홍영호	강수문	나정숙	윤성웅	조충현	김한일	이미소	황순찬	이학철	김경률
이성권	임종수	정재호	천용욱	황보승희	김시형	박상준	오광택	이중식	최승명	김동원	민경록	오일용	임용순	홍중수	강수진	남기순	이갑순	주만수	김햇님	이병은	황영미	임호상	김경림
이성열	임호	정중학	천정호	황영식	김영석	박성진	오모현	이주연	최애리	김말순	박동선	오지현	임혜경	황경희	경삼수	도원중	이경란	최복수	김현진	이상건	황현주	장준배	김경중
이성형	장귀봉	정중화	최의수	황영재	김영식	박성한	오승택	이중길	최영미	김미선	박세준	오해경	장영욱	황민식	경창수	도원중	이경란	최복수	김후승	이수진	이상건	정대훈	김경화
이성훈	장다감	정지원	최규덕(2)	황인구	김영아	박세찬	오윤덕	이진어	최용석	김미옥	박순례	우양미	장성근	황성우	고관	류영숙	이경석	최영화	나진석	이승용	여수경실련	정민	김광수
이성희(2)	장문숙	정진걸	최남연	숙초경실련	김영호	박수경	오홍철	이진형	최유정	김미정	박승원	유상철	장점숙	황용원	고미나	맹정임	이경진	최은	노국환	이연호	정승환	김광수	김광수
이순정	장문정	정진고	최달웅	숙초경실련	김용일	박승민	원선목	이철	최종현	김민수	박원기	유상태	장점오	황지숙	고영인	문강섭	이근미	최윤정	류호웅	이연한	GS칼텍스(주)	정정식	김광식
이승우	장봉주	정창성	최민근	(주)강원으로	김원일	박영희	유성봉	이태열	최지문	김민수	박용환	유재성	장현주	곽도훈	문버들	이미숙	이민근	최임이	박기두	이용성	강규호	정주현	김광인
이승준	장성호	정창화	최병근	(주)강원으로	김원일	박영희	유성봉	이필선	최진철	김백원	박원호	유재상	전희락	손천경실련	곽태영	문연숙	이민근	최재림	박민기	이희철	김미호	정지섭	김금녀
이승호	장영철	정춘희	최병찬	강동우	김유경	박용기	유영민	이필선	최춘파	김봉균	박윤환	윤기현	정계화	권태근	박경용	이병희	이정정	최현수	박민정	이정림	강성훈	정지훈	김기석



손장원	이도희	안동대학교	조우성	황은우	이보향	김현	김남혁	양우선	김미경	유유희	하종률
송경희	이동기	인천문화재단	조원민	황재우	이선미	문성대	김동욱	양진용	김미수	유진영	한광수
송문성	이동현	인천북대목부두(주)	조자영		이승현	문정수	김동전	오승용	김민수	윤권중	한문식
송원덕	이루다	연세대학교병원	조현경	전주경실련	이영식	박래수	김동훈	오영익	김봉미	윤미숙	허영
송인선	이린우	연세대학교병원	조현준		이장춘	박영민	김영준	오영환	김상관	윤일규	허종일
송한철	이문의	인천항화복지연대	지영일		강원균	이재윤	송민수	김봉석	김봉철	오정섭	현선옥
시사인천	이법열	인천항만공사	지용택		강유정	이점수	신현기	김봉철	김봉희	오창현	김성현
신나영	이병기	인천항발전협의회	진인주		강창수	이정	유사현	김봉희	유덕현	김세연	이경숙
신병철	이병철	인천항노동조합	진혁화		강호수	이주현	윤교상	김부찬	유두석	김연	이경원
신영철	이상동	인천환경운동연합	차경열		곽이구	이현희	이광호	김석	윤준식	김영진	이경주
신은철	이상영	임강민	차광윤		국승철	임규삼	이상길	김석범	이성호	김종문	이명근
신종한	이상진	임승관	차동열		권미경	임성진	이상실	김선호	이숙희	김종우	이병덕
신현수	이상훈	임준택	차득기		김대기	장석재	이용관	김성수	이용민	김종훈	이상일
심정순	이상한	임재훈	최광용		김만식	전기환	이창희	김성준	이태운	김진국	이상춘
안동찬	이애경	임희숙	최금행		김병석	정구영	임영관	김세경	김수남	장원석	김철수
안병준	이연숙	임희진	최두영		김성주	정대원	최종범	김수연	정성철	김태명	이선열
안재균	이용우	장경동 회장	최병길		김수태	조선환	한태석	김승필	조문수	김판규	이수현
안희석	이용준	장영현	최상희		김수환	조영범		김승훈	주식회사 삼성토탈	김형호	이순근
양광범	이용철	장일진	최상원		김용권	조찬안	제주경실련	김양보	주식회사 서하건설	김혜영	이승열
양희석	이윤성	장정민	최성진		김용휘	주재호		김영희	주식회사 오셀룩공장	김홍철	이원자
엄연주	이은정	전동춘	최인용		김장기	진정현	강경희	김용범	주식회사 제트섬	김효실	이종욱
여승철	이의재	전영우	최정자		김정길	채주석	강금중	김우준	주식회사 제주매일	나이만	이종필
오경환	이일희	전영진	최정실		김중원	천상덕	강봉석	김원규	채호진	내일시스템(주)	이종호
오광민	이재학	전용성	최준혁		김주희	최낙용	강승환	김익태	한남석	노덕우	이철호
오승한	이재훈	전우진	최진용		김혁수	최동성	강인창	김인영	한용환	노순식	이현정
오원선	이정림	전준권	최찬용		김형식	최문희	강지용	김종훈	한재철	류임상	임승안
우연통운(주)	이정욱	정규식	최현		라형연	최수진	강창균	김지연	한철호	류지현	장경식
유동현	이정연	정기호	최혜자		류충성	최일일	강창식	김창기	현경호	맹창호	장기수
유재진	이종업	정낙식	최희영		박규만	최원영	강태운	김창순	현영철	맹진자	장명수
이주성	이종일	정두용	최성우		박명수	최윤아	고경업	김창연	현용택	박미경	장원철
이필우	이주영	정미경	허서용		박명진	최정일	고광희	김철수	현종철	박민숙	장재식
유홍성	이주용	정석조	한기남(주)인기개발		박복희	최종렬	고동철	김형진	현창식	박복연	전승례
윤관욱	이준한	정석환	한재영(주)인기개발		박상민	최진희	고명효	문건식	홍성화	박상연	전오진
윤대기	이진준	정선오	한재영(주)인기개발		박양림	한상호	고병기	박민용		박성호	전종환
윤동구	이천우	정승연	한기남		박효민	홍순필	고봉석	박미현	천안안경실련	박수석	정미영
윤명철	이창숙	정승용	한만송		성치원	홍춘의	고봉수	박승훈	(주)아라리오	박종갑	정병용
윤미경	이창운	정연중	한창원		송악용	황병해	고상봉	박재완	(주)아라리오	박종래	정병민
윤미선	이창훈	정원경	함문숙		신희라		고석건	변성연	(주)아라리오	박종복	정성진
윤월성	이철준	정은식	함지현		심동희	정읍경실련	고석봉	변정철	김민숙	박태서	정재교
윤지의	이한우	정재영	함창학		안수현		고성봉	부상원	강용봉	박현희	정치환
윤호	이해우	정재윤	허도병		강창조	강승한	고승한	부윤삼	강은선	박우현	정하진
윤희택	이행숙	정지은	허우범		양영희	고광호	고영미	부인신	강인영	북아영	조강석
이강신	이현경	정진수	허주형		양창훈	고남용	고영빈	송대영	강대운	서규식	조미경
이강훈	이현석	정진오	허창희		염상실	고세창	고영수	송석연	강희두	송승완	조성아
이경우	이현준	정창훈	홍욱표		오상현	김선일	고영식	송승호	고영술	신동현	조영주
이경진	이형구	정충의	홍유나		오영근	김용복	고정훈	신용현	구분영	안주형	조하심
이경호	이형수	정희운	홍인성		유창엽	김용철	고대식	신종은	구자형	양경모	주홍중
이광승	이혜정	조광희	홍인식		윤영수	김은정	고행근	안영철	금병기	양승조	최경식
이귀복	이화희	조동암	황덕성		윤철웅	김을수	김강문	양문석	김경은	오수균	최경남
이기태	이후삼	조병희	황덕성		윤태영	김일중	김경용	양봉석	김기태	오승화	최석림
이길성	이홍우	조영희	황석광		은영주	김진평	김관식	양성국	김길진	오인철	최서림
이다빈	이희수	조용철	황수연		은용우	김택술	김광섭	양성주	김영호	우승윤	최신수
이덕환	인성개발(주)	조용화	황용선		이민호	김현	김기훈	양시경	김미경	유영길	최창환

김기열	김종현	박재선	신동천	유혜란	이옥희	장교환	지소연	한준희	고재성	김영수	민근홍
김기은	김진수	박재우	신두입	윤광석	이용근	장여진	지정철	한희자	고정규	김영준	민동식
김기태	김진영	박전희	신영호	윤남선	이용만	장영란	지효숙	함연자	고태성	김용구	민태운
김길홍	김진용	박전희	신원재	윤남용	이용연	장왕영	진선중	함연자	공규현	김용모	박경호
김대륙	김진창	박정하	신은순	윤미애	이우정	장원섭	진용상	허림	곽안나	김용미	박상찬
김대축	김진천	박정화	신종욱	윤수영	이운용	장원주	차동환	허범식	구자길	김용민	박상희
김두환	김창균	박종구	신종욱	윤수영	이운숙	장재훈	차준은	허수행	권경자	김우경	박석민
김미혜	김창수	박종오	신철승	윤준호	이은자	전미숙	채봉수	허입범	권남규	김원화	박선영
김병기	김춘자	박종옥	신해진	윤태범	이의성	전상진	채홍철	허입범	권대현	김윤태	박성인
김병수	김태진	박종모	심관보	윤태범	이익재	전성호	천기영	허준환	권미정	김은경	박수영
김봉덕	김학경	박진형	심규대	윤향숙	이재범	전영석	천병기	현주섭	권오경	김은영	박소옥
김상실	김학재	박진형	심형모	윤혜숙	이재용	전영애	천재영	홍경아	권오연	김은환	박시우
김선우	김학훈	박창근	안미숙	윤희태	이재학	전홍구	최근우	홍성동	권용희	김은희	박신숙
김선일	김현미	박창근	안병운	은종원	이정길	장병관	최대규	홍원표	권정호	김응철	박옥희
김선희	김현숙	박창열	안봉섭	이강문	이정숙	정선옥	최동규	홍은하	김갑봉	김의식	박용해
김선희	김형식	박태문	안신실	이강수	이정형	정성기	최영섭	홍종민	김경연	김인수	박윤수
김성국	김호열	박태문	안재영	이경수	이종송	정수현	최병주	황경애	김경원	김재경	박정남
김성국	김홍태	박흥국	안정민	이경수	이종원	정승수	최병탁	황규문	김경태	김재식	박종석
김성길	남기태	박홍재	안창호	이경호	이종환	정용희	최복순	황규문	김경호	김재영	박준용
김성애	남용대	박희자	안철환	이경화	이주운	정욱형	최상동	황인동	김계원	김재욱	박진석
김성완	노필순	박희자	양정분	이광석	이준호	정우리	최성원	황인재	김관호	김종길	박창화
김성재	노필원	반기숙	양희진	이광세	이종재	정윤지	최옥명	황진희	김광영	김종욱	박태선
김세동	류성민	배경희	어덕경	이광윤	이진관	정윤희	최용철	황현숙	김광호	김중호	박판순
김수동	류시근	배재준	엄기홍	이광재	이진혁	정은영	최은실		김균률	김중화	박한정
김숙현	마상호	배정수	엄태희	이광호	이찬우	정은희	최인근	인천경실련	김근영	김준우	박홍열
김순업	마석홍	배중열	엄희용	이교관	이창규	정인우	최인식		김기한	김진영	박홍철
김순업	마석홍	변영구	여재혁	이기훈	이창수	정일구	최재화	(사)공정무역연광	김남돈	김진회	방광설
김연희	마세진	변정해	여한수	이길수	이창수	정정순	최정관	(사)인천연인클럽	김대중	김창우	방수환
김영근	마애진	변정해	오근철	이길윤	이천수	정진웅	최정숙	(주)경인방송	김동완	김태호	방정환
김영자	목현실	부태길	오명환	이길훈	이철희	정진학	최정화	(주)동우로지스	김동우	김태훈	방중설
김영자	문미자	빈종진	오병재	이대현	이춘석	정춘화	최종	(주)디씨알이	김동호	김하운	배성수
김영준	문승욱	빈종진	오석호	이명신	김희일	정하근	최종	(주)디에스메탈	김두영	김희석	배승휘
김영찬	문연래	사단법인에이치엠	오성순	이미희	이충환	정혜순	최종악	(주)선광	김명석	김희연	배철현
김영춘	민승태	서성원	오성용	이박우	이판용	제영기	최춘봉	(주)영진공사	김민배	나영우	백동수
김예론	박경룡	서원교	오세린	이백선	이학수	조경국	최현희	(주)인천도선	김병우	나종팔	백민섭
김옥자	박경미	서은숙	오형선	이복수	이한표	조계만	하명수	(주)인천일보	김병철	나종훈	범아검수(주)
김왕곤	박기환	서재호	우근배	이부경	이해철	조길문	하태길	(주)장금상선	김봉수	남봉현	변성준
김용태	박명순	서정순	우순애	이상년	이현호	조남술	하현홍	(주)진영이앤지-최은옥	김상길	남세중	변태수
김우재	박명철	서희숙	우순희	이상원	이현희	조병돈	한국전력	(주)한성라인	김상섭	남승용	봉성범
김윤경	박병건	성주영	우종만	이상태	이호영	조생남	한덕이	8인천석유화학(주)	김상열	남영우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김용재	박병대	성희연	우현녀	이상학	이호일	조성복	한덕이	강경하	김선홍	남중희	사단법인 환경개발협회
김은이	박상옥	송경자	원경희	이석환	이훈	조연숙	한돈집	강덕우	김설	남지승	사단법인무지개
김은하	박상용	송경은	원용식	이선	이희상	조용필	한만준	강명성	김성근	남성섭	서경옥
김의섭	박상인	송영득	원종수	이선정	임영원	조은미	한순택	강명수	김성수	남홍우	서광춘
김인기	박상철	송영득	원종순	이상규	임선미	조장래	한연숙	강상근	김성태	노국진	서부길
김재순	박선규	송은주	유경윤	이상훈	임성규	조정숙	한영순	강석	김세훈	노승환	서용성
김재임	박선영	송이식	유상열	이순창	임성식	조종성	한영옥	강석철	김수자	도영운수(주)	서주선
김재홍	박성희	송정호	유상희	이승남	임승한	조철현	한은상	강욱엽	김승남	도지성	서태원
김정범	박수자	송준규	유승열	이승현	임은혁	조춘순	한은상	강정호	김승희	류병희	서해안
김정수	박안래	송창신	유영숙	이양순	임지희	조택선	한재수	강진수	김시철	류재홍	선광종합물류(주)
김정진	박옥선	신계영	유재준	이영구	임철만	조택선	한정민	강대경	김연옥	명선옥	성기건
김정진	박인	신덕선	유재준	이영구	임철재	조한영	한정현	고덕봉	김연옥	명창준	성덕규
김정천	박인오	신동신	유태무	이영현	임현권	주상운	한준학	고동희	김영구	목동원	성용원
김종복	박일엽	신동운	유학선	이영훈	임혁빈	주상운	한준호	고교속팩리(주)	김영국	문상범	손병옥



김경자	김순영	김준기	류규식	박재경	석명용	심수영	유선우	이행원	이정협	임재경	정일택
김경호	김승호	김준년	류근모	박재관	선종열	심영미	유성훈	이명순	이중섭	임재규	정장영
김계옥	김양식	김준수	류근윤	박재익	선지연	씨투넷(주)	유순영	이명호	이중수	임중승	정재량
김관식	김연식	김준태	류덕환	박종관	설경철	안병대	유승덕	이명훈	이중실	임지민	정준영
김광남	김영근	김지연	류연욱	박종국	성기남	안영숙	유영경	이미순	이중원	임지은	정지성
김광렬	김영란	김진철	류용걸	박종룡	성창기	안장현	유영숙	이민영	이중윤	임한빈	정진
김광복	김영란	김창석	류우열	박종만	성환용	안창만	유영아	이범구	이중한	임한수	정진아
김광성	김영미	김천식	류재형	박종선	손세희	안태희	유옥순	이범석	이주봉	임한경	정진원
김광직	김영민	김철	류재호	박종순	손윤희	양계인	유응모	이병관	이주선	임혜숙	정진하
김광희	김영배	김홍희	류지봉	박종을	손정훈	양기정	유재일	이병호	이주형	임희영	정철
김교선	김영식	김태성	류진호	박종혁	손호진	양기춘	유주하	이복순	이준수	장경석	정충선
김규설	김영재	김태성	류찬걸	박주호	손희준	양미선	유철호	이상규	이준희	장남운	정대진
김규원	김영준	김태준	류학천	박진우	송봉화	양지영(주)주식회사	유행열	이상근	이중섭	장동대	정해영
김기영	김영진	김태희	류현숙	박찬규	송선호	양찬섭	유현덕	이상복	이중원	장병순	정현순
김길후	김영태	김평환	리드산업개발(주)	박창호	송은숙	엄경출	유환철	이상식	이중현	장병희	정희승
김남진	김영환	김필제	미래광	박철규	송의천	에듀크리인트	육미선	이상중	이중훈	장선배	조경주
김대광	김영환	김학구	맹석주	박철석	송일근	연규순	육종길	이석희	이지숙	장영건	조경주
김대중	김영희	김학민	맹현숙	박철완	송재경	연규용	윤건영	이선미	이지영	장재봉	조국현
김동암	김예진	김학실	맹정희	박춘섭	송재봉	연방희	윤관수	이선순	이지영	장호진	조규호
김동욱	김완희	김한태	문성오	박현소	송정규	연영국	윤기희	이선우	이차영	장흥원	조동순
김동일	김현상	김현상	문종국	박형배	송종찬	연영태	윤미정	이선희	이찬호	전광호	조미정
김동진	김용덕	김현숙	문희창	박호표	송태성	연인하	윤병희	이성민	이창수	전금식	조상현
김동현	김용덕	김현주	민경억	박홍래	송태화	연준	윤상이	이수복	이철중	전길자	조성구
김동형	김용석	김현진	민광기	박희분	송필수	연철흠	윤석위	이수영	이철희	전년규	조성수
김두호	김용태	김형우	민선희	반영운	송해근	연호석	윤송현	이수한	이학철	전동기	조성오
김말숙	김용규	김형창	민승기	반주현	송효현	염우	윤정수	이순남	이한훈	전병선	조수종
김명배	김원식	김효일	민창식	배병기	신경아	오경아	윤정숙	이순호	이해병	전세식	조승연
김명수	김유미	김홍구	박경수	배상은	신경운	오국진	윤진현	이사회	이항미	전용필	조영화
김명자	김유정	김홍성	박관주	배응환	신국희	오명진	윤찬열	이수배	이현수	전용표	조용숙
김문옥	김유호	김현국	박광수	백미경	신규식	오미정	윤태한	이승준	이현수	전우석	조원주
김미라	김윤모	김홍래	박구원	백승협	신동선	오병건	윤한식	이양우	이현식	전지현	조윤행
김미숙	김은경	김효일	박기환	법무법인 주성	신동예	오상록	윤현우	이연욱	이현주	전창해	조은애
김미숙	김은옥	김희수	박남순	변광섭	신동호	오석송	윤혜정	이영로	이형각	전희택	조을선
김미현	김응일	김희숙	박동구	변만수	신명섭	오세란	윤호영	이영숙	이형우	정길재	조이현
김민호	김응철	김희식	박영규	변민수	신명수	오연경	이가빈	이영진	이형찬	정란희	조일원
김병우	김인숙	나영구	박문희	변상태	신명자	오영미	이건철	이영희	이혜정	정미화	조정식
김병의	김인자	나재경	박미영	변상호	신범식	오영애	이경수	이육인	이호상	정병숙	조종호
김봉주	김일경	남기상	박민수	변성민	신성일	오영필	이경순	이유정	이화련	정상섭	조춘희
김상우	김재복	남대우	박민순	변은영	신승주	오종영	이광식	이윤범	이효숙	정상신	조항진
김상수	김재원	남성욱	박범혁	변의수	신영구	오준영	이광용	이인구	임건철	정상욱	조형규
김선기	김재홍	남성욱	박석현	변장섭	신영창	오창민	이광희	이인우	임근수	정상완	조혜경
김선영	김재학	남윤빈	박성호	변종윤	신영희	오태경	이귀숙	이일만	임기수	정성래	조희정
김선희	김정문	남중순	박세웅	봉원진	신우희	오태진	이귀형	이일우	임기중	정성희	주서택
김성민	김정승	네모토 마사쓰구	박연수	봉윤근	신용재	오훈영	이규선	이정희	임동현	정수창	주재구
김성수	김정웅	노근호	박영미	서건석	신철영	우상동	이규호	이재덕	임미애	정순배	주재현
김성중	김정일	노만균	박영미	서길용	신태경	우장영	이근식	이재영	임병탁	정승희	주창백
김성천	김정초	노재광	박영숙	서대석	신필희	우정순	이기만	이재영	임병원	정연주	지동규
김성희	김종구	노진호	박영순	서미화	신한건설(주)	원광희	이기정	이재원	임성진	정영래	지민
김송일	김종기	대신정(해운대동)주	박용석	서완석	신해운	유경훈	이길재	이재원	임성총	정영섭	차은녀
김수열	김종철	도경민	박용연	서용원	신현규	유광식	이길환	이재은	임승빈	정영희	차인용
김수환	김종태	도선봉	박은경	서우석	신현식	유국렬	이대응	이재춘	임용수	정우영	채태영
김숙자	김주복	두개비실업농조합	박인숙	서준철	신희숙	유근수	이동로	이정규	임용현	정은희	채희관
김순구	김준경	디자인포커스	박인자	서효석	심상학	유민상	이만형	이정수	임일수	정일기	창주산업(주)관리

최은실	한범덕	홍성학	권용범	박대진	신선철	이인섭	최영진
최재수	한상화	홍성학	김정숙	박도수	신해숙	이종민	최희수
최정호	한수환	홍순주	김광배	박동운	안호춘	이택수	춘천상공회의소
최종문	한승환	홍승표	김남철	박미현	양태식	이희중	하상준
최각규	최종예	한영선	홍우표	김대영	박상규	윤준형	임재선
최경호	최진욱	한원영	홍응표	김석중	박상렬	유제원	전규호
최광민	최진안	한은례	황경수	김선배	박정근	윤장혁	전근우
최명섭	최충진	한인섭	황규혁	김승현	박형일	윤재경	전민식
최상범	최태호	한정현	황락훈	김영준	방명열	윤재선	전성희
최상영	최현숙	함영욱	황미화	김영식	방수미	윤진현	전양호
최상호	최현태	함중철	황선진	김용재	방수진	윤학로	전운성
최상희	최형도	허석렬	황성주	김정현	변용환	이관행	전호성
최상희	최호균	허성만	황영미	김중식	변좌용	이복연	정의성
최영선	황보주(주)개발	허영	황중빈	김진상	변지량	이상섭	정지만
최영중	표한홍	현상주	황희연	김찬중	석영기	이상철	정종교
최우식	풍경섭	현진		김평안	손현기	이석원	정휘돈
최운침	하옥란	형미희	춘천경실련	김한택	손홍주	이승준	조성모
최원호	하재성	홍강희		남형우	송창근	이원규	조성자
최윤정	하태중	홍석원	고태규	박경철	신길호	이은영	진장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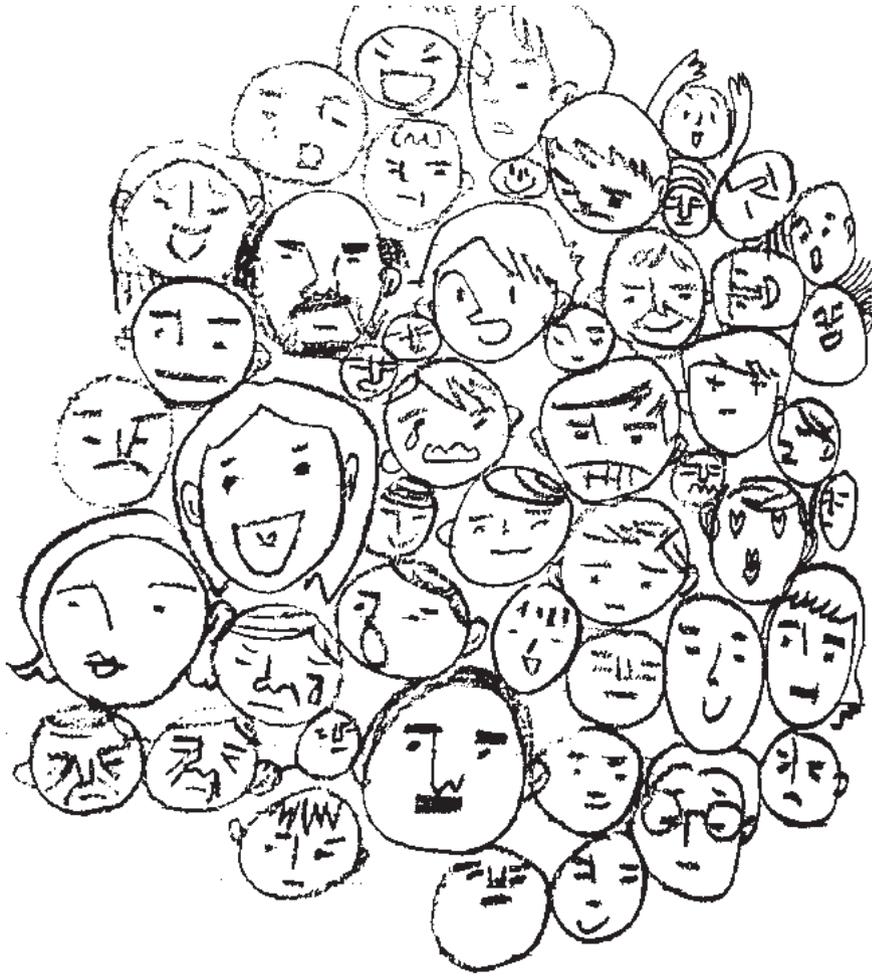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02-741-8566	윤순철	부동산국책감시팀	02-3673-2146	국장: 김성달, 부장: 최승섭
기획교육팀	02-766-5626	국장: 김한기, 간사: 오세형	(사)경제정의연구소	3673-2144	국장: 권오인
회원홍보팀	02-766-5627	부장: 채준하, 간사: 윤은주	(사)경실련동일협회	3673-2142	국장: 김삼수, 간사: 조성훈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장: 권오인, 간사: 최예지, 정택수, 이성운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3673-2147	국장: 남은경
정치사법팀	02-3673-2141	국장: 김삼수, 간사: 유애지	시민권익센터	766-5624	간사: 권태환
사회정책팀	02-3673-2145	간사: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766-5625	국장: 윤철환
국제팀	02-766-5623		월간 경실련	766-5626	이사: 윤유정, 김용재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광역시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김동현, 부장: 박수민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조광현, 국장: 최은영, 간사: 박은영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이광진, 부장: 서해림
부산경실련	051-761-3951	처장: 이훈진, 부장: 윤정선, 팀장: 배성훈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김승민, 부장: 김성아, 팀장: 이경진
경기·강원권		
경기도협의회	031-253-2265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허정호, 부장: 최미영
군포경실련	031-392-3111	국장: 오은정
수원경실련	031-253-2266	처장: 노건형, 부장: 유병욱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고선영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이종준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추성운, 간사: 변정혜
양평경실련	031-772-2091	국장: 여현정
강릉경실련	033-645-0828	처장: 심현섭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김경석, 부장: 김경아
춘천경실련	033-636-6631	국장: 권용범, 간사: 오은옥
충청권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간사: 이수희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관, 유영아
경상권		
거제경실련	055-637-9451	국장: 이양식
경주경실련	054-773-7851	간사: 왕서정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전라·제주권		
순천경실련	061-751-9993	간사: 장홍영
여수경실련	061-643-2110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김창모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서재숙
전주경실련	063-273-4903-4	간사: 고동우
정읍경실련	063-536-6225	간사: 김은정
남원경실련	063-633-6662	정책위원장: 이점수
제주경실련	064-726-2530	간사: 김신숙

백대수니



2017. 5. 9. 火
20:00